ISSN 1975-5163
WORKING PAPER 제470호

금융경제연구
2012. 01

한국의 經濟成長과 社會指標의 변화

조윤제* · 박창귀** · 강종구***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원
***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한국의 經濟成長과 社會指標의 변화

조윤제* · 박창귀** · 강종구***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02-705-8682, yjcho@sogang.ac.kr)
**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원 (02-759-5441, changgui@bok.or.kr)
***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02-759-5418, jongku@bok.or.kr)

본 논문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한국은행 김준일 경제연구원장, 토론자(경제연구원 손종칠 전문연구원, 박종우 전문연구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대한 자료 수집에 애써준 김나영, 김선지 RA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차 례

Ⅰ. 연구 배경 ····· 1

Ⅱ.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 5
1.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 ····· 5
2. 사회지표 변화 ····· 10
가. 소득불균등 ····· 10
나. 노동소득분배율 ····· 18
다. 고용 및 임금 격차 ····· 25
라. 자영업자 비중 및 소득 추이 ····· 38
마.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 43
바. 교육 격차 ····· 48
사. 급격한 고령화 ····· 52
아. 노인문제 악화 ····· 58
자. 범죄율 및 자살률 급상승 ····· 64

Ⅲ.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 68
1. 소득불균등과 여타 사회지표들 간의 관계 ····· 68
2.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에 관한 논의 ····· 71
3. 소득불균등 확대 원인 실증분석 ····· 85

Ⅳ.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94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99
1. 자산소득에 의한 소득불균등 확대 방지 ····· 101
2.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 102
3.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103
4.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 105
5.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106
6.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 107

<참고문헌> ····· 109

<부 록> ····· 113

한국의 經濟成長과 社會指標의 변화

지난 60년간 우리경제는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그와 상응하게 제고시켰는지, 나아가서 향후 우리의 경제정책방향과 제도가 과거와 같은 틀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모색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불균등, 범죄율, 자살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가 빠르게 악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빈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소득불균등, 실업률 등 주요 사회지표의 이면을 보면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그렇지만 재정의 복지기능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가장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는 고용격차로 이어지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소득불균등의 악화는 자살률, 살인율 등 여타 사회지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08개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핵심지표인 소득불균등의 확대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일인당 소득수준, 노동소득분배율, 인적자본투자, 정부의 복지지출 등의 증가는 소득불균등을 완화시키며 자영업 비중, 비상근직 비중 등의 상승은 소득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자산소득에 의한 소득불균등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의 경제정책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주제어 : 사회지표, 삶의 질, 소득불균등, 지속성장, 사회갈등완화
경제학문헌목록 주제 분류 : I30

Ⅰ. 연구 배경

지난 60년간 우리나라는 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953년 69달러[1]에 머물던 1인당 국민소득[2]이 2010년 2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고도성장을 한 것은 戰後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과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과연 우리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그와 상응하게 향상시켰느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 국민들의 복지 관련 각종 정부지원 확대 요구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새로운 경제사회제도의 추구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요구는 지난 90년대 이후 심화된 소득불균등, 양극화 등과 더불어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는 빠른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니계수, 5분위계수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뚜렷이 나빠지는 한편 자살률이 1990년 인구 십만명당 7.6명에서 2009년에는 31.0명으로 크게 높아지고 범죄율, 살인율, 이혼율 등도 급상승해 왔다. 기대수명, 소비수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지표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악화되어 온 것이다. 이는 우리국민이 일상적 삶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도는 경제성장과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재조명과 복지제도의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강화시켜온 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각종 사회지표가 악화되어온 것은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볼

---

1)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975년 기준 GDP 통계에서는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였으나 동 수치는 과거의 국민계정 매뉴얼(「1953 SNA」)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자가 현재의 국민계정 매뉴얼(「1993 SNA」)에 의해 재추계 하였다.

2) 엄밀하게는 1인당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을 가리키며 종전의 1인당 명목 국민총생산(nominal Gross National Product)과 동일한 개념이다. 1975년 기준년 계열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정자본소모액 등이 제외된 것으로 현재 통상 사용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수 있으나 이 또한 결국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정책과 제도가 조성한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써 결국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수출증대, 내·외자 동원을 통한 투자확대, 산업발전 가속화 등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파생효과와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금융, 기업, 노동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는 그것이 가지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더욱 깊게 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글로벌 스탠더드,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확대가 고용조건의 악화, 소득의 불균형,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과거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추구해 온 것이기도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높아져 오고 있다. 최근 들어 OECD, World Bank 등이 삶의 질 지표에 관심을 갖고, 프랑스정부는 'Beyond GDP'[3] 관점에서 2009년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그 예이다. 우리정부도 OECD에 우리나라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그 연구 결과가 2011년 6월에

3) 2008년 프랑스정부는 GDP 통계가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와 센 교수를 주축으로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년이 넘는 연구와 논의 끝에 2009년 일명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에서 질로의 전환 혹은 보완이다. 둘째, 경제적 '생산'보다는 인간의 '행복'으로 강조점의 전환이다. GDP는 시장의 생산 을 화 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경제 구성원이 체감하는 물질적 '복지'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GDP보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더욱 중요하다. 셋째, 분배를 통한 평균 지표의 보완이다. 평균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계층 간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면, 일부 계층에서는 오히려 물질적 후생이 악화될 수 있다. 넷째, 행복은 물질적 생활수준의 일차원적 지표가 아님을 강조한다. 즉 새로운 대안지표는 보건, 교육, 정치 환경, 사회적 관계,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안정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강조다. GDP는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자원을 더욱 더 많이 소모할수록, 그리고 환경을 더 심각하게 파괴할수록 늘어나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로 발간되었다.[4] 이 보고서는 성장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를 파악하고 '사회화(go social)'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학계에서도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사회지표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 관찰과 분석보다는 주로 어느 특정한 지표의 변화나 특정 정책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초점을 두어왔다. 가령 강성진(2010)의 경우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당국자가 재정·통화정책을 실시할 때는 거시지표뿐만 아니라 거시정책의 효과가 부유층에 미치는 영향과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경준(2009)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상대빈곤율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 증가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분배의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김태완·전지현(2009), 박명호(2009), 성명제(2009) 등이 주로 분배 문제를 분석하였고 은기수(2005), 유경원·노용환(2007), 민문홍(2009) 등은 자살 원인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각종 사회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것이 그 동안 우리나라가 도입해온 정책 및 제도적 환경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시작되었다. 물론 자료와 분석기법의 한계로 의도한 분석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고 또한 그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지만 여러 사회지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 시도는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1970년을 전후로 절되어 있는 GDP통계를 연쇄지수로 연결하여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요 사회지표 변화 추이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본다.

2) OECD(2011), "The OECD's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Ⅲ장에서는 사회갈등지표의 상승을 가져오는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지표 악화 원인을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소득불균등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Ⅴ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1.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

지난 60년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는 UN이 제시한 매뉴얼인 「1993 SNA」에 의해 작성된 1970년까지의 현행계열과 「1953 SNA」에 의해 작성된 1953~1970년의 구계열로 시계열이 절되어 있다.[5] 구계열과 현행계열 간 차이는 통계가 겹치는 1970년의 경우 총GDP 기준 약 4.8%가 이며, 산업별 차이는 더 크다. 더구나 2009년 한국은행이 1970년 이후 현행계열에 연쇄가중법을 도입하고 기준년을 개편하면서 고정가중법에 의한 과거 시계열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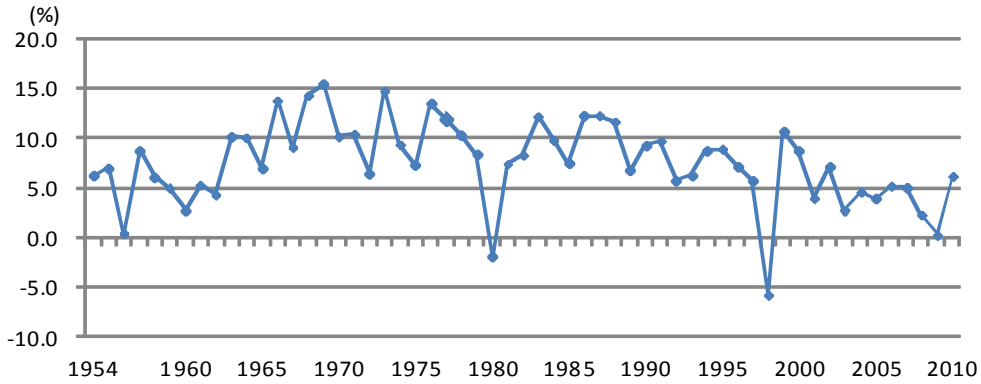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장기간의 경제변동을 보기 위해서는 연쇄가중법 등을 적용한 현행 GDP 작성기준을 과거에도 소급적용해 주어야 한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소급된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UN이 발표한 각종 국민계정 매뉴얼, GDP 자료, 우리나라의 과거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여 1953~1970년까지의 구계열에도 연쇄가중법을 적용하고 포괄범위를 일치시켜 1953~2010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을 구해 보았다.

이렇게 구한 시계열을 이용하여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그림 Ⅱ-1>과 같다.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평균 7.6%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1953년 222억원(2005년 가격기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실질GDP가 2010년에는 1,000조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

5) UN은 국민소득 통계 매뉴얼로 「195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통계기법의 개선, 경제의 글로벌화, 정부역할 등이 변하면서 수정된 「1968 SNA」와 「1993 SNA」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매뉴얼이 수정됨에 따라 최종 매뉴얼인 「1993 SNA」 기준으로 과거 시계열을 수정해주어야 하지만 기초자료 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는 1970년까지만 공식 소급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낙년, 곽승영 등 개별 연구자에 의해 절된 시계열을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그림 Ⅱ-1> 경제성장률



자료: 저자 작성

경제성장률을 <표 Ⅱ-1>과 같이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전쟁이 포함된 50년대에는 성장률이 5.6%에 머물렀으나 60년대에는 9.2%, 70년대에는 10.3%로 성장률이 점차 높아졌다. 이는 해외 차관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오일쇼크이후 3저 호황을 겪은 80년대에는 8.6%, 외환위기를 겪은 90년대에는 6.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0년대에는 4.6%로 점차 낮아졌다.

<표 Ⅱ-1> 연대별 경제성장률

(%)

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전체평균
경제성장률	5.6	9.2	10.3	8.6	6.7	4.6	7.6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산업구조 면을 보면 1953년에는 농림어업이 전산업에서 46.9%를 차지한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으나, 2010년에는 농림어업은 2.6%로 낮아지고 제조업(30.6%)과 도소매, 금융 · 보험 · 부동산 등의 서비스업(58.2%) 비중이 큰 산업국가로 변모하였다. 1953년 이후 2010년까지의 산업별 성장 배율을 보면 농림어업은 4.2배 확대에 그친 데에 반해 제조업은 664.3배 확대되었다.

<표 II-2> 산업구조 변동[1] 및 성장[2]

(%, 배)

구분	농림어업	제조업	전가수[3]	건설업	도소매	운수보관업	금보부사업[4]	사회개인	기초GDP
1953	46.9	7.4	0.4	1.9	11.6	1.5	16.0	3.8	100.0
2010	2.6	30.6	2.0	6.5	8.5	4.1	19.0	18.0	100.0
2010/1953[2]	4.2	664.3	1349.4	98.6	55.8	245.5	69.2	76.6	55.5

주: 1) 연쇄지수 GDP는 하위 합이 상위 합과 불일치 2) 불변 부가가치 기준 성장 배율
3) 전기, 가스, 수도업, 4)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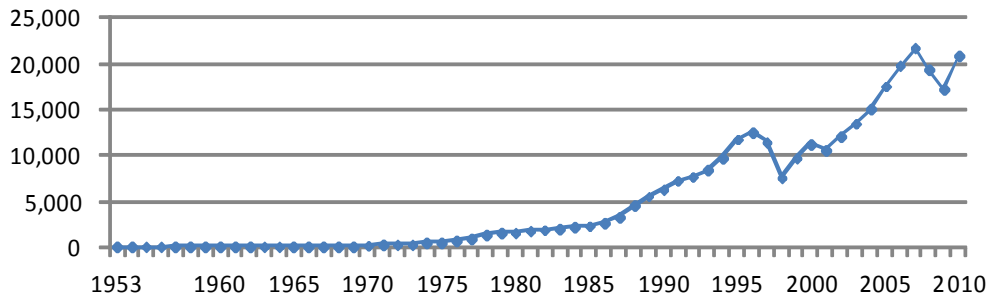
그 결과 1953년 69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에는 2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의 세계 랭킹도 World Bank 자료(atlas 방식)에 따르면 1962년 66위에서 2009년에는 40위권으로 크게 도약하였다.

<표 II-3> 1인당 국민소득 추이[1]

(달러)

구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1인당 국민소득	69	83	255	1,660	6,303	11,292	20,759

주: 1) 1975년 기준년 개편 GDP통계로는 1953년 67달러, 1970년 243달러였으나 2005년 기준년 개편 기준을 소급적용하면서 '53~'69년 1인당 국민소득이 다소 상승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이후 경제성장에 비해 실질소득이 더디게 상승하였다. 이는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익이 2005년 이후 손실로 반전된 데 기인한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제품 가격은 크게 높아진 반면 IT 제품 등의 수출가격은 낮아져 실질무역손익이 손실로 반전되었다.

<표 II-4> 지표와 체감 국민소득 비교

(십억원)

구분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교역조건 반영 실질무역손익	국내총소득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국민총소득
1970	61.9	7.5	69.4	1.1	70.2
1980	145.9	8.1	154.0	-2.5	151.5
1990	369.0	48.7	417.7	-0.2	417.5
2000	694.6	26.9	721.5	-3.6	717.9
2005	865.2	0.0	865.2	-0.8	864.4
2006	910.0	-13.2	896.9	1.3	898.2
2009	981.6	-35.6	946.0	4.1	950.0
2010	1042.1	-39.7	1002.4	0.1	1002.5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한편 우리나라는 성장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위기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6]였다. 외환위기는

6)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저축에 비해 투자가 많아 순저축률(총저축률-총투자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한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저축률에 비해 과다한 투자가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순저축률이 플러스를 기록해온 일본과 대만은 국내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겪었지만 외환위기는 없었다.

순저축률(총저축률-총투자율)

(%p)

구분	한국	일본	타이완
1970	-8.0	2.0	0.0
1990	-0.2	0.7	6.6
1995	-0.9	1.2	2.3
2000	2.3	2.0	2.7
2005	2.3	3.2	5.7
2010	2.8	-	9.4
평균	-0.62	1.97	5.48

자료: 각국 국민소득 통계

특히 금융, 기업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대폭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자본시장, 외국인 직접투자 등 대외개방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대폭 수용한 것인데, 이는 시장거래의 투명성, 자율성, 개방성을 확대시킨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 양극화, 상대적 빈곤층 확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2. 사회지표 변화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시현해 왔으나 최근 20여 년 동안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분배, 살인율, 자살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가 훨씬 빠르게 악화되어 왔다.

특히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와 노인층의 빈곤이 심화되고 이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재정의 복지기능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는 고용격차로 이어지면서 소득불균등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7]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불균등 지표(지니계수, 5분위 계수), 노동지표(고용률, 임금격차 확대), 사회갈등 지표(자살률, 범죄율, 이혼율) 등을 중심으로 시계열 및 국제 비교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사회지표가 우리사회의 실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소득불균등

> 우리나라 소득불균등 지표는 뚜렷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제 소득불균등 정도는 지니계수로 나타난 불균등 정도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위소득의 6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국가 간 비교,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 우리나라 자산집중도 통계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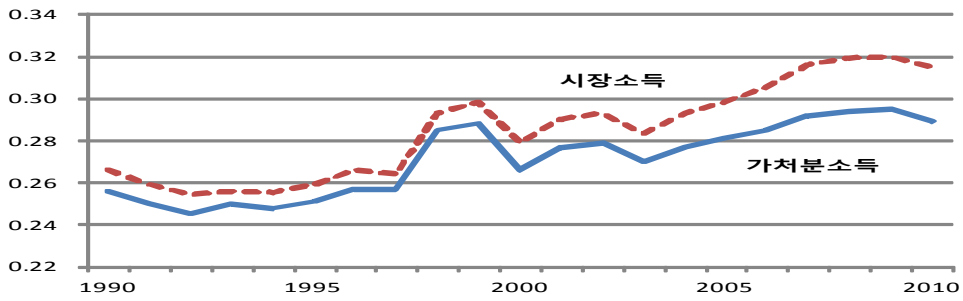
7) 사회지표의 창시자인 바우어(Raymond Bauer)는 사회지표란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사회여건의 상태와 변동을 요약함으로써 현존하거나 파생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지표」, p.33

소득불균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지니계수[8]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과 시장소득에서 조세 등을 공제하고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가처분소득 기준이 있는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보다 실질적인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0.256에서 2010년 0.289로 모두 크게 높아졌다.

<표 II-5> 지니계수[1]

구분	1990	1995	1998	2000	2005	2009	2010
시장소득[2]	0.266	0.259	0.293	0.279	0.298	0.320	0.315
가처분소득[3]	0.256	0.251	0.285	0.266	0.281	0.295	0.289

주: 1) 도시가계 2인이상 비농가 기준(전국가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경우 0.03 더 높음)
2)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3)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KOSIS



8)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계산 방법은 먼저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소득누적비율)을 그린다. 그러면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상 소득분배균등선(45°선)을 긋고,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동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 다만 지니계수는 소득 분포가 어느 계층에서 더 불평등한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수식은 $G=\frac{1}{n}\left[n+1-2\left[\frac{\sum_{i=1}^{n}(n+1-i)y_i}{\sum_{i=1}^{n}}\right]\right]$, n=사람 수, y_i=개인 i의 소득, $y_i \le y_{i+1}$

더불어 5분위배율[9]도 1990년에는 3.72배였으나 2010년에는 4.82배로 높아졌으며 1995년 대비 2010년 현재 30% 이상 상승하였다.

<표 II-6> 5분위배율

(배)

구분	1990	1995	1998	2000	2005	2009	2010
5분위배율	3.72	3.68	4.55	4.05	4.55	4.97	4.82

주: 도시가계 2인이상 비농가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한편 다양한 지표를 통해 소득불균등 정도를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I-7> 소득불평등도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1]

구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평균로그편차[2]	10분위소득분산/(평균)^2
한국	0.315	5.7	0.190	0.374
OECD평균	0.314	5.4	0.185	0.625

주: 1) 2008년 기준, 전국가구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소득불균등도가 높음
2) log(평균소득/10분위내 각 분위별소득)의 평균으로 산출
자료: OECD(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이처럼 소득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1990년대 이후 가계의 가처분소득 분포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렬한 상태에서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 50%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빈곤율은 1990년에는 7.1%였으나 2010년에는 12.5%로 상승하였다.[10]

9)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대비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배수로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함께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10)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빈곤선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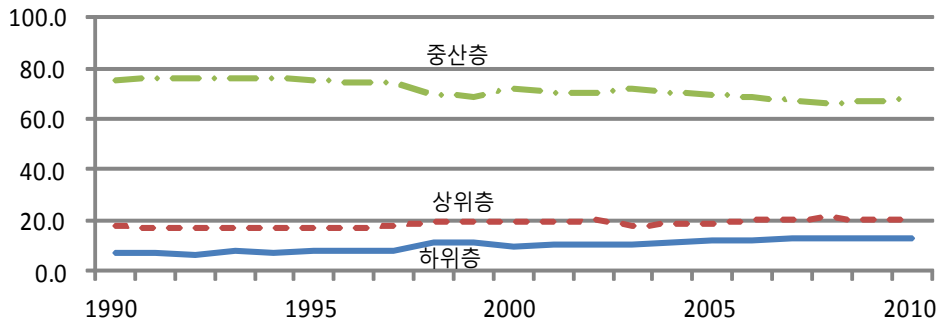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는 17.5%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9.5%로 크게 상승한 후 2010년에는 20.0%로 더욱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5.3%, 2010년에는 67.5%로 외환위기 이후 크게 줄었다. 다시 말해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표 Ⅱ-8> 소득구간별 비중

(%)

구분	1990	1995	1998	2000	2005	2009	2010
하위층 (중위소득50%미만)	7.1	7.7	10.9	9.2	11.9	13.1	12.5
중산층 (중위소득50%~150%)	75.4	75.3	69.6	71.7	69.2	66.9	67.5
상위층 (중위소득 150%이상)	17.5	16.9	19.5	19.0	18.9	20.0	20.0

주: 도시가계 2인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특히 20% 하위소득, 그 중에서도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는 실질 경상소득이 감소하기까지 하였다(<표 Ⅱ-35 참조>). 그 결과 이들 계층이 실질소비지출 규모를 타 계층에 비해 거의 동결하고 있음에도 가계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1]

것은 그만큼 사회 내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11)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해보면 경상가격 기준으로 동 계층 가계 적자(소득-가계지출)는 2003-2010년 중 38.3%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 변동추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1990년대 이후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 심화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II-9> 지니계수 국제비교(시장소득 기준)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대만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85	-	0.35	0.44	0.42	-	0.38	0.40	0.35
1990	0.27	-	0.45	0.44	-	0.37	0.41	-
1995	0.27	0.40	0.48	0.45	-	0.47	0.44	0.40
2000	0.28	0.43	0.48	0.46	-	0.49	0.45	0.43
2005	0.30	0.44	0.49	0.45	-	0.49	0.43	0.45

주: 우리나라는 도시가계 2인이상 가처분 소득 기준(전국 가구에 비해 2010년 기준 0.03 낮음), 외국은 전국가구 기준으로 추정되지만 나라에 따라 포괄범위는 다를 수 있음. OECD자료에서 around 2000은 2000년, mid-2000s는 2005년을 지칭한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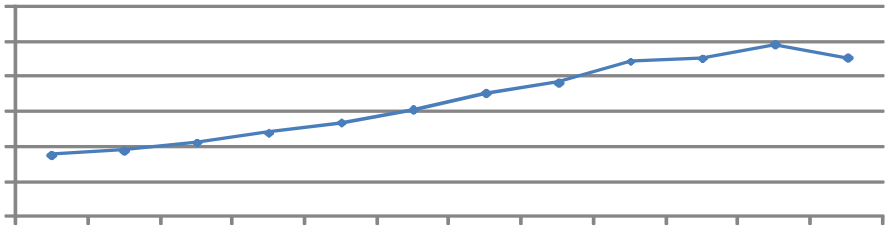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및 OECD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대만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85	-	0.30	0.34	0.31	0.29	0.30	0.20	0.22
1990	0.26	-	0.35	0.35	0.31	0.29	0.21	-
1995	0.25	0.32	0.36	0.34	0.32	0.28	0.21	0.24
2000	0.27	0.34	0.36	0.35	0.33	0.29	0.24	0.26
2005	0.28	0.32	0.38	0.33	0.34	0.29	0.23	0.28

주: 우리나라는 도시가계 2인이상 가처분 소득 기준(전국 가구에 비해 2010년 기준 0.0를

~™ EJ ”• Z‹ b``K„ bI&I”6) GFF„ aJ&ä bJFÅ ¬) ,
²@Ôß% &GZ wÈ2 ± × ‹±’Ð [=líî µ 0ø Ò =… œ
žFÅ S 6 ³‹0• 45 %& Úo ð × { #Œ•ð jy 6
³ íî ± × ‹±’Ð [{ Ü ƒ ™‹ Ý % &žZ wÈ2
†I EGFFFZ •¶0Ç ÿ Î Ž†] •íî ‹±’Ð [¬
[šŒ• M µŒ• • › îŒ• ½, - ‹¢† ö ×íî
. % &

IJ K L8 HMN08 HM



{ ð ×

---

bGZb``K„ 45 ¬ GFÅ JMKKuC M0 GFÅ žFžüCíî bI&I”Çí MGFF„6 GGK7
jy œ ¬ GFÅ KMžaiC M0 GFÅ GbKCíî žK&”6 Æ| %& GFF„6 žJK
ü7 jy œ ¬ GFÅ `MFGiC M0 GFÅ b`` üCíî aJ&à ôõ ²@Ôß% & M
mÃ o6 M#Œ•ð ¬ ‡0 GFÅ Œ• ~™ aJ” Ny , é ×® "è ð × "±
Ûb``` „ 45 jy ‹ bžaü;7 ß•ü GFF„6 žJI ü;7íî G&L # ßy M îf †
ð Eþ£ ÿZ : EGFF„Ã ã ƒ ±¶ : Z Ñ áŒ•» @1 ±6] %Üø) ÛGFF„K
Ã ã GFF„ ” • ‘!ù¡Ã Ê = GFF„® 1 Ò DI- . y ö= „ ,6 ! G ž
„… Œ• ~™‹ ñŠ %y .= Õ %Üy — %& "± Û¬ GFÅ Œ• ‹ r¼
Œ• Ib&aÅu ™•0y ö•ü GFF„Ã ã 2¯ƒ ù¬ Ü(y Ç% E,Šm. GFbb&a&GLZ
bžZ ‹¥ ð × { #Œ•ðu jy [í °- @¬íî 0y ± × { /:‹± G
¬ › ¾‹u @¬íî % & ð × #Œ•ð jy b``K„ bMGGL7 MGFF„a GMGžL7 M
GFF„ žMJIb 7 ß% &
baZ †I EGFFFZ 5x2(‹± [‹ Œ•6 [šŒ• M µŒ• • › îŒ• •2
, ½, 2¯2y ö%y <f % & îŒ•6 › › îŒ• Ž•• ÒÓ ñ0 î ›
îŒ• ½, æø •$±D/ ½¦ Q %&

우리나라 재산소득의 편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토지소유자의 상위 50만명(3.7%)이 소유한 토지비율이 2006년 현재 전체 토지소유의 56.7%에 이르고 있다.[15] 그리고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실시한 "2010년 가계금융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63으로 나타났으며 10분위(상위 10%) 계층의 순자산 점유율은 47.2%였다.[16]

<표 II-11> OECD 주요 국가별 자산통계 비교

구 분	한국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
금융자산/총자산(%)	21	22	16	15	28	17	38
순자산 지니계수	0.63	0.75	0.68	0.61	0.89	0.66	0.84
상위 10% 순자산점유율(%)	47.2	53	45	42	58	45	71

자료: 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2010),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자산 통계[17]를 이용하여 국민소득(GNI) 대비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배율을 추정하여 보면 동 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II-12> 국민소득(GNI)대비 실물자산 배율

(배)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실물자산/GNI	5.4	5.8	6.0	6.5	6.7	6.8	6.8	6.9
금융자산/GNI	6.7	6.8	6.7	7.2	7.6	8.2	8.3	8.9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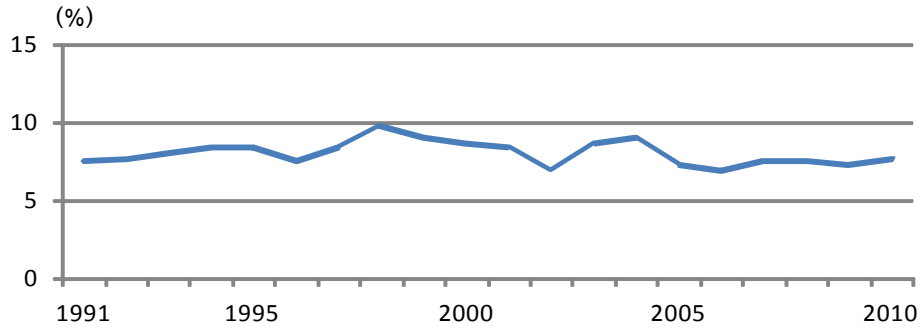
15) 우리나라의 총토지소유자는 1,367만명에 이른다. 행정자치부(2007),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보도자료.
16) 통계청 · 금감원 · 한국은행(2010),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보도자료.
17) 통계청 지역소득통계팀이 발표하는 제도부분별, 자산별 자산(당해연말가격) 통계 중 생산자산잔액(실물자산잔액), 금융자산잔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KOSIS에서 다운 받았다.

이처럼 소득대비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는 재산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낮아[18] 경상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19] 특히 고소득층에서 감소폭이 큰데, 이는 고소득 응답자들이 재산소득의 절대액을 적게 응답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0] 따라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지니계수가 실제 소득불균등 정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18) 가계동향조사 전체 근로소득은 2003년대비 2008년 28.9% 증가한 반면 재산소득은 7.8% 증가에 머물렀다.

19)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상의 개인 순재산소득이 순본원소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 내외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산소득 항목에 건물임대료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통계 상의 재산소득은 이자수입과 배당금이 주로 차지하며 임대료는 토지, 지하지원에 대한 것으로 전체 재산소득의 5% 내외에 불과하다.

국민소득통계상의 개인 재산소득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제도부문별 소득계정)

20)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잔액기준, 총수신)는 2003년 3.69%에서 2008년 4.8%로 상승하였다. 생산자물가 부동산임대 지수도 2003년 97.1에서 2008년 106.3으로 9.5% 상승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ECOS

<표 II-13>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상의 재산소득 비중[1)]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평균	1.41	1.34	1.34	1.25	1.28	1.16
(1분위:저소득)	1.21	0.92	1.12	0.77	1.07	0.96
(5분위:고소득)	2.03	1.79	1.69	1.92	1.83	1.51

주: 1)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구분류)의 경상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2009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이전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된 재산소득 동향을 보기 위해 구분류 시계열을 사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나. 노동소득분배율

자영업자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20년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노동소득 분배율을 추정해보면 수출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은 한국은행에서 국민소득 지표의 하나로 발표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21)]를 국민소득(NI)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00%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차감하면 자본소득분배율이 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통계가 있는 1970년 41.0%에서 꾸준히 상승

21)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 계산에 사용되는 피용자보수에는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 산출 목적이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노동과 자본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면 노동소득분배율 계산 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 분모는 국내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는 2000년대까지는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그 이후에는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추세를 보이다가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다소 하락하였다.

<표 II-14> 노동소득분배율

(%)

구분	1970	1980	1990	1996	1997	2003	2006	2010
노동소득분배율	41.0	50.1	57.0	62.6	61.4	59.2	61.3	59.2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그러나 동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이 노동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소득(영업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개 자영업자의 경우 자본을 투자하고 스스로 근로를 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이 모두 소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분리가 가능하다면 문제는 간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기초자료도 없기 때문에 국민계정 추계 국제 매뉴얼인 SNA[22]에서는 이를 혼합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일괄해서 포착해 영업잉여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 SNA」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23] 혼합소득의 대부분은 소유주나 가계 구성원들에 대한 보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는 대부분 농업, 영세 도소매업, 음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더욱 높을 수 있다.

22) European Commission · IMF · OECD · United Nations · World Bank(2009), 「System of Natinal Accounts 2008」.

23) "In many cases, the element of remuneration may dominate the value of mixed income", 「2008 SNA」(7.9 항목) p.132

<표 II-15> 노동소득분배율 작성방법 비교

	노동소득분배율	수정 방안
작성방법	(피용자보수[1])/요소비용국민소득(NI)	(피용자보수[1]+자영업자소득)/요소비용국민소득(NI)
특 징	-노동소득분배율이 현실보다 낮게 계산 -최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완만하게 하락	-노동소득분배율이 현실보다 높게 계산 -최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급격히 하락
장 점	-국민소득통계 국제 매뉴얼인 「1993 SNA」에 의거 작성	-자영업자 변동을 반영
점	-자영업자 소득 악화 시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	-자영업자 소득 중 자본소득을 제외하지 못하고 근로소득으로 일괄처리

주: 1)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포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국민소득 통계상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국제기준에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가령 경기침체로 자영업자가 몰락한 경우 실제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어야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이 영업잉여에 포함된 관계로 거꾸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좋아지게(자본소득분배율이 나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노동소득분배율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자영업자 소득에서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부분과 노동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가용한 기초통계가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모두 자본소득 혹은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혹은 자영업자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만약 자영업자 비중이 안정적이라면 자영업소득을 제외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만 가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나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영업자 소득을 아예 제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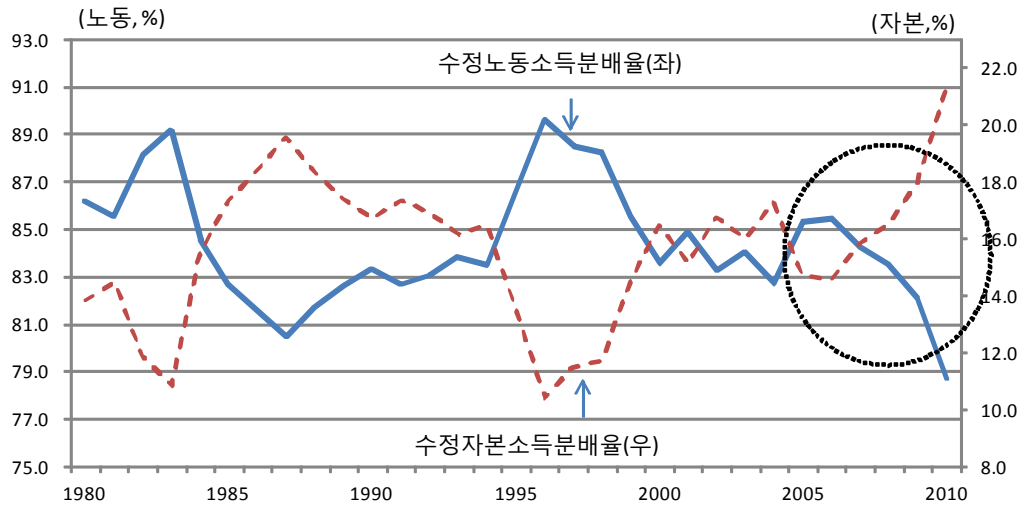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소득을 피용자보수로 보고 산출한 노동소득분배율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자영업자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전액 간주한다면 문제는 없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창업한 변호사 사무실, 의원 등을 제외하면 도소매업,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영세하여 자영업자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 Ⅱ-32>를 보면 2010년 현재 근로자가구 가구당 평균 소득대비 자영업자가구 가구당 평균소득 비율이 77.3%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간주하고 노동소득분배율[24]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다. 동 방법은 자영업자 비중 변동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Ⅱ-3>은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수정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이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외환위기 전까지는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6년 노동소득분배율이 85.4%까지 상승한 이래 계속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78.7%까지 떨어졌다. 반면 자본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크게 낮아졌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4) 현재의 국민계정 자료상으로는 자영업자의 혼합소득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자영업자 수에 1인당 평균소득을 곱해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1인당 평균소득과 피용자 1인당 평균소득이 같다고 전제하였다. 만약 자영업자 1인당 평균소득이 피용자 1인당 평균소득보다 낮다면 피용자소득의 일정 비율만 반영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동 방법을 적용하였더니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Ⅱ-3> 수정노동소득 및 자본소득 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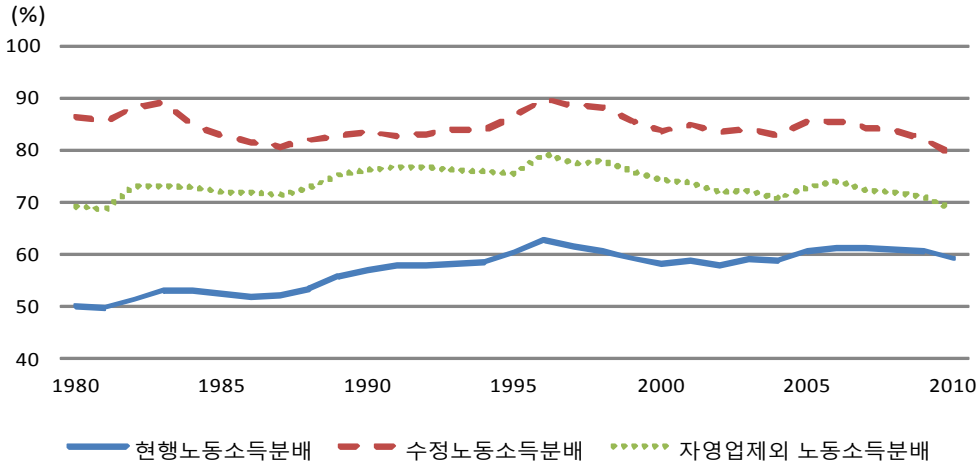


<그림 Ⅱ-4>는 ①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노동소득분배율 ② 자영업자 소득을 피용자보수로 보고 산출한 노동소득분배율[25] ③ 자영업자 소득을 제외한 노동소득분배율[26]을 산출하여 비교한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을 피용자 보수로 간주한 경우와 자영업자 소득을 제외한 경우는 최근 급격히 하락하면서 서로 유사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25) 미국노동통계국(BLS)은 노동소득을 부가가치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노동소득은 피용자보수에서 정부, 비영리 등의 피용자보수를 제외하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혼합소득 중 노동소득을 더하여 산정한다. 혼합소득 중 노동소득은 산업별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이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산출한다. 동 방법은 생산성분석을 위해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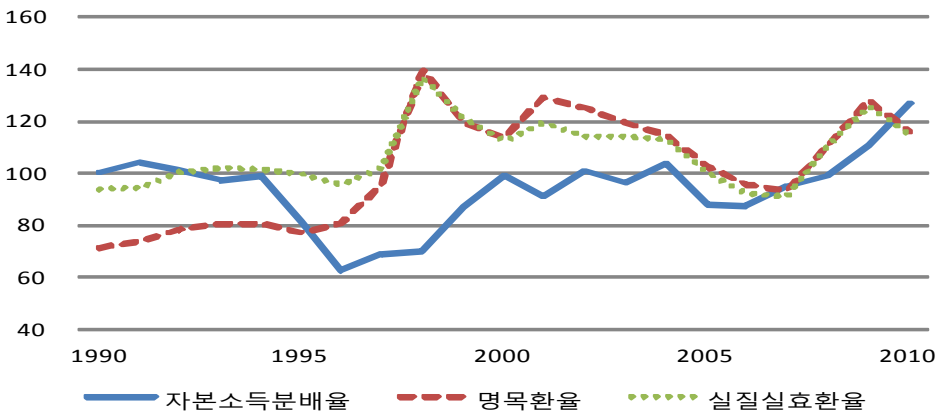
26) 국민계정상의 영업잉여에서 자영업자소득을 제외하는 방법은 국내총생산 중 영업잉여 항목에서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중 개인부문 (원천) 영업잉여를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영업잉여에는 주거서비스의 영업잉여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자료 상태에서는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주거서비스는 의제산업이므로 실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Ⅱ-4> 노동소득분배율 비교



한편 <그림 Ⅱ-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본소득분배율과 환율변동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촉진되고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높여 자본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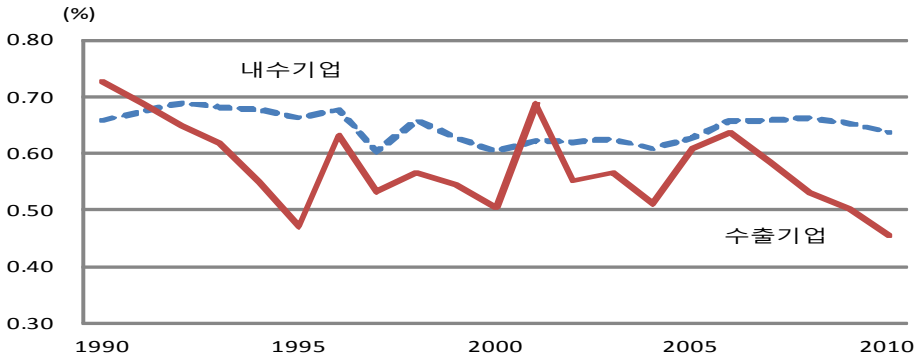
<그림 Ⅱ-5> 환율변동과 자본소득분배율



주: 비교의 편의를 위해 명목환율은 1/10로 축소하고 실질실효환율은 실질실효환율지수를 역수로 나타내었으며 자본소득분배율(자영업자 소득 반영 후)은 실제 비중(%)을 6배 하였음
자료: 실질실효환율지수(BIS), 명목환율(한국은행), 자본소득분배율(저자 작성)

물론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으로 자본소득분배율이 낮았으며, 2010년에는 환율이 하락하였으나 정부의 공기업 임금삭감 정책 등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면서 자본소득분배율이 높아진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환율상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면서 영업잉여(자본소득)를 임금보다 크게 증대시킨다. 또한 환율 상승시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수출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7]

<그림 Ⅱ-6>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주: 제조업 수출, 내수 기업 인건비와 영업잉여 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매년)

27) 고환율은 수출기업에는 원화 환산 제품가 상승으로 이익을 증가시키지만 내수기업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채산성의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 고용 및 임금 격차

우리나라 실업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실업통계 작성 방식의 차이, 취업준비생의 누락, 반실업상태의 자영업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체감 실업률은 실업률 지표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노동하고 있으며 임시직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1) 실업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995년 2.1%에서 2010년 3.7%로 높아졌다. 이러한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현재 9.6%까지 높아졌으며 대만, 일본의 경우도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표 Ⅱ-16> 참조).

이처럼 우리나라 실업률[28]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29] 구직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실업자에서 빠지고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잠재실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실업자 지표를 세분해서 실제 실업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하고 있는데[30]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

28) 통계청은 ① 지난주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②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③ 지난주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서 빠진다.

29)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이 학생, 군인 신분이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됨 ② 자영업자, 농어업 종사자가 일이 없어지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③ 고용통계조사의 표본에 고시원, 기숙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④ 공무원이나 공기업 또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표도 발표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KDI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 설문조사시 취업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바뀌어도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1]

<표 II-16> 실업률 국제비교

(%)

구분	한국[1]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90	2.5	2.1	-	1.7	5.6	6.9	4.8	9.2	1.8	5.3
1995	2.1	3.1	-	1.8	5.6	8.5	8.1	11.6	9.0	4.9
2000	4.4	4.7	3.1	3.0	4.0	5.4	7.7	10.0	5.8	3.4
2005	3.7	4.4	4.2	4.1	5.1	4.8	11.1	8.9	7.7	4.6
2010[2]	3.7	5.1	4.1	5.2	9.6	7.8	7.1	9.1	8.3	3.2

주: 1) 1999년까지는 구직기간 1주, 그 이후는 4주
2)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는 2009년
자료: OECD, 한국은행 ECOS

실업률을 연령대 별로 좀 더 세분하여 보면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다. 15세~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90년대 6%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8% 수준으로 높아졌다.

30) 미국의 실업 지표는 아래와 같은 종류로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실업률 통계 종류

U1	노동력 인구 중 15주 이상 장기 실업자
U2	실직자 및 임시고용이 종료된 자
U3	4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우리나라와 같은 의미의 실업자)
U4	U3+취업 의사는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U5	U4+가사. 육아. 학업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못한 사람
U6	U5+일주일에 35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자료: 미국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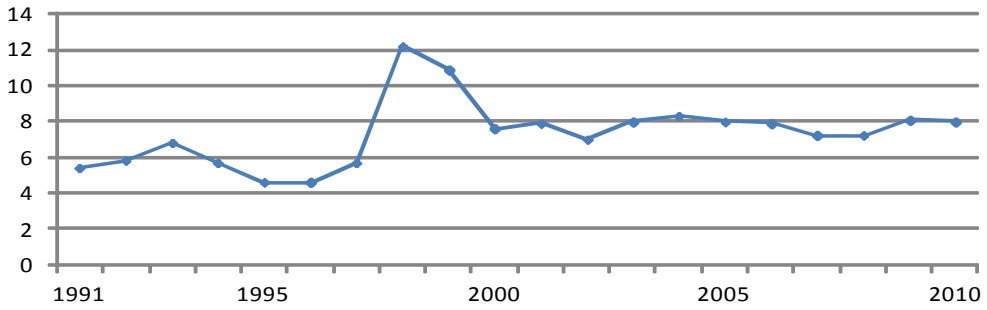
31)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기존 설문조사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실업률은 4.0%였으나 새로운 방식으로 조사한 실업은 5.4%로 1.4%p가 상승하였다. '취업을 원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만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돼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실업자의 비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황수경(2011),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청년층을 중심으로", KDI.

<표 II-17> 15세~29세 청년실업률

(%)

구분	1991	1995	1998	2000	2005	2009	2010
청년실업률 (15세~29세)	5.4	4.6	12.2	7.6	8.0	8.1	8.0

자료: 통계청



한편 선진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15세~24세 실업률을 통해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노르웨이보다 높지만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다. 2000년 이후 한국, 일본, 노르웨이는 실업률이 다소 낮아진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18> 우리나라 15세~24세 청년 실업률 국제비교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2000	10.8	9.2	9.3	11.7	8.4	20.7	11.9	10.2
2003	10.1	10.2	12.4	11.5	10.6	18.3	13.8	11.7
2005	10.2	8.6	11.3	12.2	15.2	20.2	22.3	12.0
2007	8.8	7.7	10.5	14.4	11.7	18.7	18.9	7.3
2009	9.8	9.1	17.6	18.9	11.0	22.8	25.0	9.2

자료: OECD

65세 이상 노년 실업률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19> 90~2000년대 노년 실업률 국제비교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90	0.6	2.4	3.1	1.9	0.3	0.3	1.3	2.7
1995	0.4	2.5	3.8	2.2	0.5	2.2	1.3	0.0
2000	0.7	1.8	3.5	1.5	0.8	0.6	1.7	1.7
2005	0.7	2.0	3.3	2.5	1.0	1.7	1.8	1.0
2009	1.1	2.6	6.4	2.7	1.0	5.8	2.2	1.1

자료: OECD

(2) 고용률

세계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32]은 2009년 현재 58.7%로 90년대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수준으로는 OECD 평균보다는 높았으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보다는 낮았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일본, 미국의 고용률은 급격히 낮아진 반면 노르웨이는 반대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3]

32)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군인, 재소자 등 제외)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직 넘자 등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실업률 통계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

33) OECD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고용률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층을 포함한 15세 이상의 고용률이 15~64세까지의 고용률보다 높다. 노년층을 포함하면 고용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도리어 높아진 것이다.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은 62.9%인 반면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7.4%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률은 세계은행 자료와 거의 유사한데, 2009년의 경우 세계은행 자료는 58.7%인 반면 통계청 자료는 58.6%로 거의 유사하였다.

<표 II-20> 15세 이상 고용률 국제비교(World Bank)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OECD 국가평균
1991	59.0	62.4	61.1	56.9	56.3	49.8	64.9	59.8	56.5
1995	60.4	61.5	62.4	55.5	53.5	48.3	58.1	60.4	55.6
2000	58.2	59.4	64.0	58.0	53.7	49.6	58.7	65.0	56.4
2005	59.2	57.8	62.0	58.9	52.3	51.2	59.4	63.0	56.0
2009	58.7	56.5	58.8	57.3	55.2	51.0	59.4	64.8	55.1

자료: 세계은행

15세~24세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2009년 현재 25.5%로 1991년 36.0%에 비해 꾸준히 낮아져왔으며 OECD 평균 40.0%에 비해 낮고 일본, 미국, 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동 연령대에 학생이거나 군인인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고용률 국제비교(OECD)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OECD 국가평균
1991	63.7	73.6	73.0	72.0	67.6	60.9	82.5	74.3	66.8
1995	65.9	74.2	74.7	70.4	65.2	59.9	73.6	75.1	66.2
2000	64.5	74.4	76.4	73.4	66.2	62.0	75.7	79.2	67.5
2005	67.7	75.1	74.2	74.2	66.5	64.0	75.3	76.7	67.6
2009	67.4	76.9	70.7	72.5	71.6	64.5	74.0	78.4	67.3

자료: OECD

<표 II-21> 15세~24세 고용률 국제비교(World Bank)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OECD 국가평균
1991	36.0	42.9	55.7	60.1	57.7	32.5	59.2	49.0	47.3
1995	36.2	44.6	57.2	53.5	48.7	26.6	42.6	48.7	44.8
2000	31.0	42.4	58.5	55.7	46.9	28.8	42.6	59.3	45.2
2005	31.1	40.7	52.2	54.5	42.6	31.1	38.8	52.5	42.6
2009	25.5	39.6	46.2	49.7	45.6	31.7	39.4	53.1	40.0

자료: 세계은행

(3) 근로시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0년 2,193시간으로 35개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스웨덴에 비해서는 50%이상 길게 일하고 OECD 국가 평균 1,749시간에 비해서도 25%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 연간 근로시간

(시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OECD 평균
1980	2,864	2,121	1,813	1,767	1,751[1)]	1,860	1,580	1,517	1,911
1990	2,677	2,031	1,831	1,765	1,578[1)]	1,705	1,503	1,561	1,862
2000	2,512	1,821	1,836	1,700	1,473	1,591	1,455	1,642	1,818
2010	2,193	1,733	1,778	1,647	1,419	1,554[2)]	1,414	1,624	1,749

주: 1) 1980년, 1990년 자료는 서독 수치
2) 2010년 프랑스 자료는 2009년 수치
자료: OECD

(4) 근로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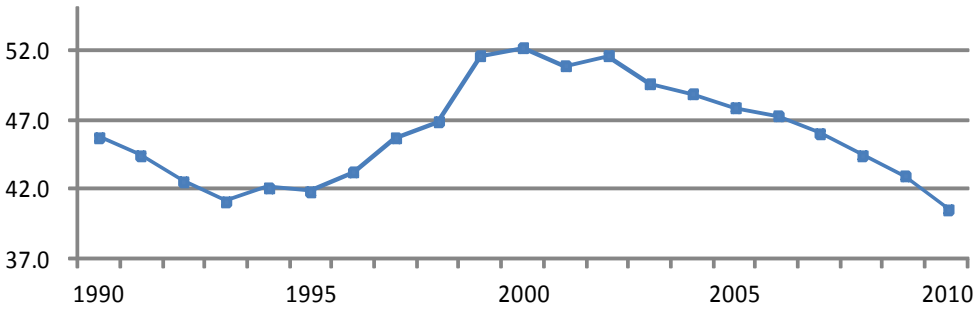
임금근로자[34] 중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35]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II-23>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수와 비중

(천명, %)

구분	1990	1995	1998	2000	2005	2009	2010
근로자수	5,011	5,400	5,762	6,965	7,268	7,064	6,885
비중[1)]	45.8	41.9	46.9	52.1	47.9	42.9	40.6

주: 1)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임시직 및 일용직 중에서 대형소매점 판매 종사자 등은 정규직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한편 통계청이 2003년부터 조사한 비정규직[36] 통계를 보면 2003년 4,606천명에서 2011년에는 5,995천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2.6%에서 2005년 36.6%로 상승한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34)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지칭한다.
35)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임시직부터 먼저 구조조정하게 된 결과로 보인다.
36)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2002년 작성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동 합의문에 따르면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되고 있다.

<표 Ⅱ-24> 비정규직 근로자수와 비중[1)]

(천명, %)

구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14,149	14,968	15,882	16,104	16,479	17,048	17,510
정규직	9,542	9,486	10,180	10,658	10,725	11,362	11,515
비정규직	4,606	5,483	5,703	5,445	5,754	5,685	5,995
(한시적)	3,013	3,615	3,546	3,288	3,507	3,281	3,442
비정규직비중	32.6	36.6	35.9	33.8	34.9	33.3	34.2

주: 1) 매년 8월 조사 결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OECD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 비중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19.2%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았다. OECD 자료의 임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37)] 및 비전형[38)] 근로자를 제외한 한시적[39)]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표 Ⅱ-24>에 비해 상당히 낮다.

<표 Ⅱ-25> 임시직 비율 국제비교

(%)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OECD 평균
2004	24.7	13.9	5.7	12.4	13.5	15.1	9.9	11.4
2005	24.1	14.0	5.8	14.1	14.1	15.8	9.5	11.8
2007	22.3	13.9	5.9	14.6	15.2	17.5	9.5	12.1
2009	21.3	13.7	5.7	14.5	14.5	15.3	8.1	11.6
2010	19.2	13.8	6.1	14.7	15.1	15.8	8.3	12.0

자료: OECD

37)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통계청,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용어설명 p.33

38)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기)근로자 등을 일컫는다.

39)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5)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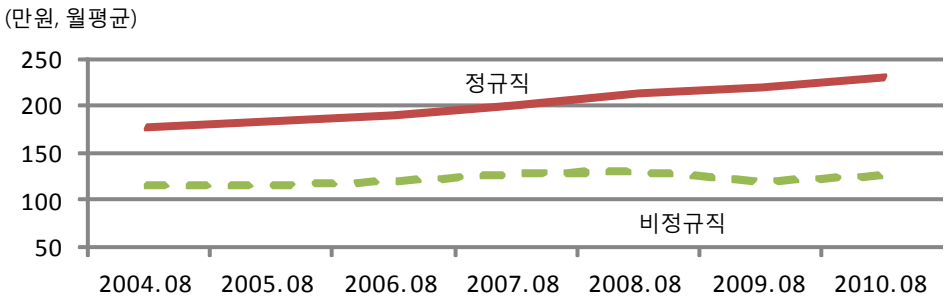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지난 10여 년간 확대되어왔다. 그리고 이것이 근로계층 내에서의 소득격차 확대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은 정규직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비정규직에 비해 15% 가 많아 월평균 급여수준으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정규직 월평균임금/비정규직 월평균임금」 비율은 2004년 1.54배에서 2010년에는 1.82배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6>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격차[1)]

(배)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격차	1.54	1.60	1.59	1.57	1.64	1.83	1.82

주: 1) 「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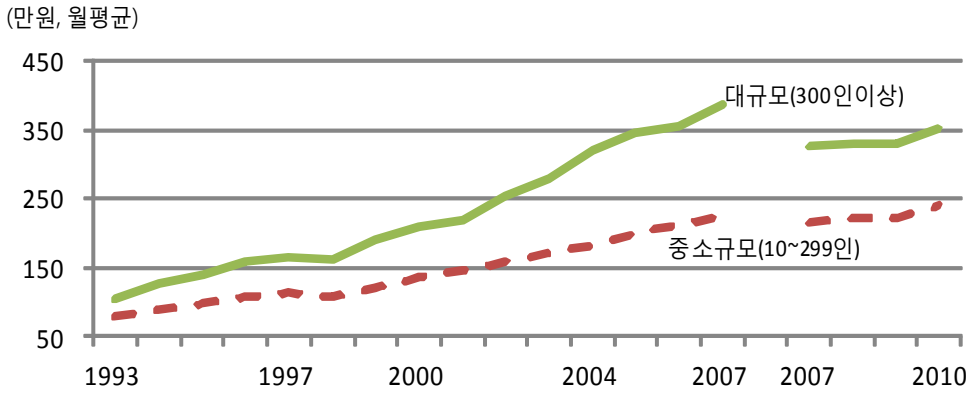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도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으로는 1993년 1.29배에서 2010년 1.33배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이후 통계 작성방식이 바뀐 것을 감안하면 실제 2010년 통계보다 훨씬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Ⅱ-27>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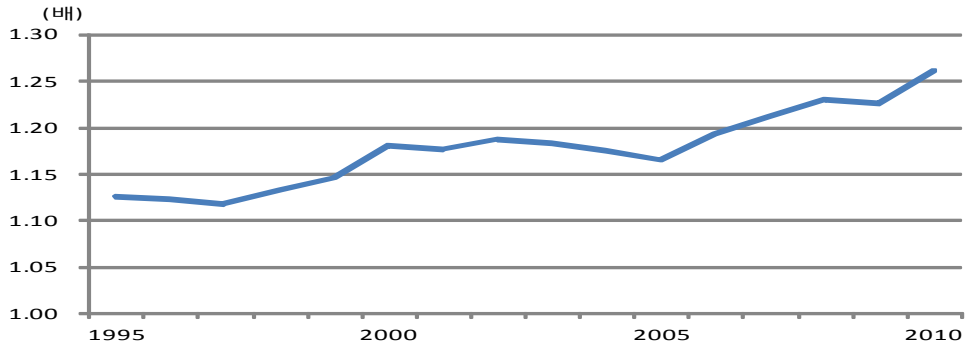
구분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0
임금격차	1.29	1.33	1.41	1.48	1.56	1.29	1.33

자료: 통계청 (2007년을 경계로 부문분류가 바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림 Ⅱ-7> 전산업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주: 전체 사업체 대상 중소기업(10~300인 미만), 대기업(300인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규모 · 학력 · 연령계층 ·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또한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격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51.9%에서 2008년 38.8%로 크게 낮아졌지만 아직도 주요국가에 비해 크게 높았다.

<표 II-28> 남·녀 임금격차[1]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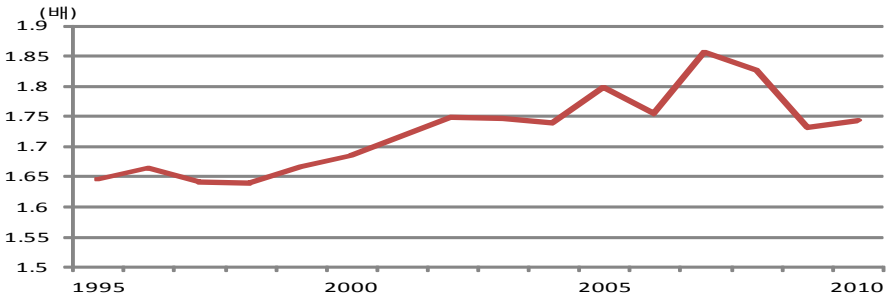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1985	51.9	41.7	33.0	33.6	27.0	17.0	18.4	23.4[3]
1992	45.9	38.9	25.1	28.4	25.5	14.7	19.1	20.3
2000	40.7	33.9	24.5	24.0	23.0	10.8	15.5	20.4
2005	38.3	32.8	19.8	20.4	24.8	12.1	14.9	19.5
2008	38.8	30.7	20.1	21.0	25.4	12.0[2]	15.4	21.2

주: 1) Trends in gender wage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남성임금-여성임금)/남성임금 비율로 계산
2) 프랑스 2008년 통계는 2007년 수치
3) 핀란드 1985년 통계는 1984년 수치
자료: OECD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도 확대되었다. 월급여총액 기준으로 대졸이상은 고졸보다 급여가 1995년 1.47배 많았으나 2010년에는 1.54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한편 정액급여 기준으로는 대졸이상이 고졸이하보다 1995년 1.65배 많았으나 2010년에는 1.72배 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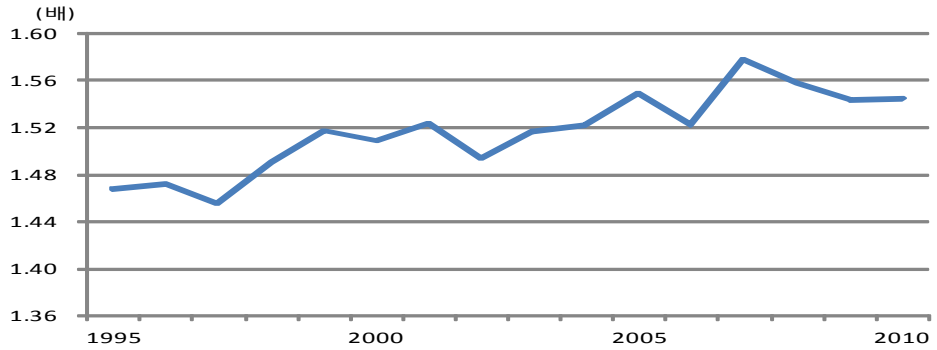
40) 월급여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 기준 대졸이상/고졸 임금 배율은 2007년 1.86배를 정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여 2010년 1.74배를 기록하였다.



<표 II-29>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1)]

	월급여총액 기준(천원)			정액급여 기준(천원)		
	고졸(A)	대졸이상(B)	B/A	고졸(A)	대졸이상(B)	B/A
1995	861	1,264	1.47	735	1,214	1.65
2000	1,186	1,789	1.51	1,034	1,730	1.67
2005	1,618	2,506	1.55	1,411	2,429	1.72
2007	1,780	2,807	1.58	1,554	2,727	1.75
2010	1,947	3,006	1.54	1,698	2,918	1.72

주: 1) 고졸과 대졸이상 간 임금 배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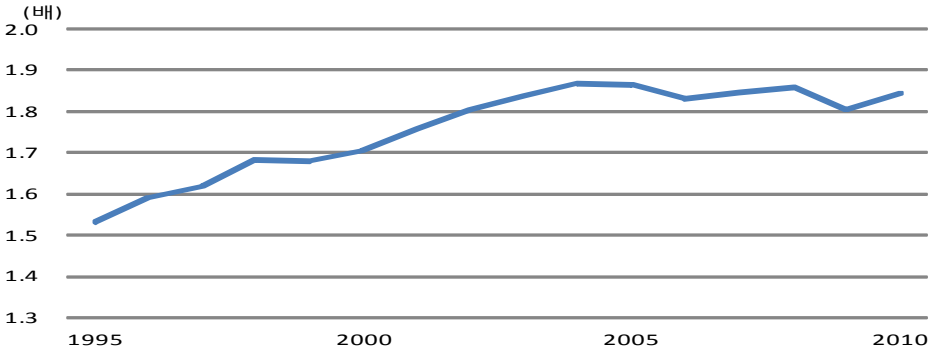
주: 월평균 급여총액 기준 (대졸 이상/고졸) 임금

학력 격차에 이어 고기술과 저기술 간 임금격차도 확대되었다. 관리자 · 전문가 · 사무종사자 등 고기술 종사자는 서비스 · 판매 · 기능원 · 순노무자 등 저기술 종사자에 비해 1995년에는 1.53배의 급여를 많이 받았으나 2010년에는 그 차이가 1.84배까지 확대되었다.

<표 II-30> 高기술과 低기술 간의 임금격차

	월 급여총액(원)		A/B
	고기술(A)[1]	저기술(B)[2]	
1995	1,054	689	1.53
2000	1,486	872	1.70
2005	2,187	1,173	1.86
2007	2,432	1,318	1.85
2010	2,694	1,461	1.84

주: 1) 고기술=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직종별 근로자 수로 가중평균)
2) 저기술=서비스 종사자(1999년 이전은 판매종사자 포함), 순노무직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주: 1) 고기술=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직종별 근로자 수로 가중평균)
2) 저기술=서비스(1999년 이전은 판매종사자 포함), 순노무직근로자

라. 자영업자 비중 및 소득 추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는 근로자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으며, 자영업자 간 소득격차가 크다. 특히 하위 20%는 근로자가구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심지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여 半 실업상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965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총취업자의 36.8%에 달하였으나 농림어업 비중이 줄어들면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비중은 하락하지 않고 2005년까지 27% 내외에 머물다가 이후 재차 하락하여 2010년 23.5%로 줄었다.

<표 Ⅱ-31> 자영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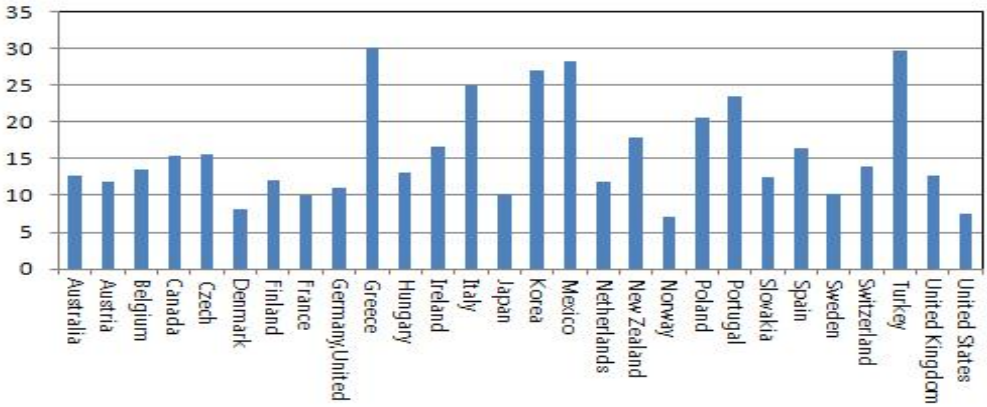
(천명, %)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10
자영업자(a)	2,984	4,008	4,679	5,569	5,864	6,172	5,592
임금근로자	2,609	4,751	8,104	12,899	13,360	15,185	16,971
총취업자(b)	8,112	11,691	14,970	20,414	21,156	22,856	23,829
(a/b, %)	36.8	34.3	31.3	27.3	27.7	27.0	2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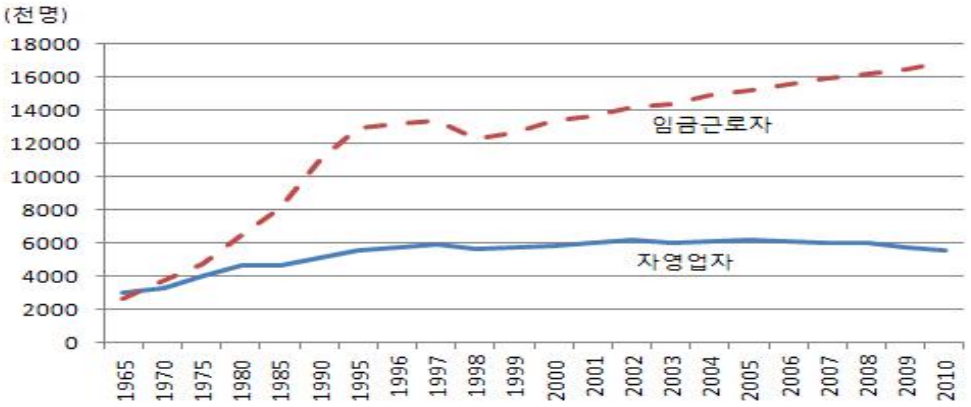
<그림 Ⅱ-8>과 같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리스, 이태리, 멕시코, 터키 등과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II-8> OECD 각국의 자영업자비중(2005년 기준)



외환위기 이후 40~50대 이후의 근로자들이 대 해고당함으로서 이들의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특히 2000년대 들어 가계신용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으로 대거 진출하게 된 것이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노동의 미스매치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과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자영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은퇴자, 노령자들이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자영업 형태로 근로를 계속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자료: 통계청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통계청 「가계동향조사」상의 '근로자외 가구'의 대부분은 자영업자 가구임)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다. <표 Ⅱ-32>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근로자 가구 가구당 평균소득의 77.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Ⅱ-32>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자영업자 가구[1] 평균소득 비중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영업자가구 평균소득 비중	79.2	78.3	76.0	73.7	73.1	72.5	75.5	77.3

주: 1) 통계청「가계동향조사」상의 '근로자외 가구'의 대부분은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므로 이해의 편의상 '근로자외 가구' 대신 '자영업자 가구'로 표기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 이상)

특히 하위 20%를 비교하여 보면 자영업자 가구는 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심지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여 半 실업상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0년 787천원으로 최저생계비 821천원[41] 보다 낮게 나타났다.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자영업자 가구 소득의 비중도 2003년 55.1%에서 2010년에는 48.8%로 하락하여 영세 자영업자 가구 소득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 Ⅱ-33>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가구 비교

(천원, 월평균,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가구(a)	1,205	1,231	1,276	1,377	1,385	1,492	1,493	1,613
근로자외가구(b)[1]	664	708	666	679	696	712	724	787
소득비중(b/a, %)	55.1	57.5	52.2	49.3	50.2	47.7	48.4	48.8

주: 1) 자영업자 및 무직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1) 2010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363천원에, 당해 연도 근로자외가구 가구원수 2.41명을 적용해서 추산하였다.

한편 2010년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7.3%였으나 하위 20%를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 가구 평균소득이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8.8%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영업자 간 소득불균등이 근로소득자 간 소득불균등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자영업자 가구 평균소득 비율과 하위 20%의 근로자소득/자영업자소득 비율 간 차이가 2003년에는 24.1%p였으나 2010년에는 28.5%p로 확대되어 자영업자 간 소득불균등 악화 정도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34> 평균소득과 소득 하위 20% 간 비중 격차[1)]

(%p)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격차	24.1	20.8	23.8	24.4	22.9	24.8	27.1	28.5

주: <표 Ⅱ-32>의 평균소득에서의 비중과 <표 Ⅱ-33>의 소득 하위 20%에서의 근로자가수 소득/자영업자가구 소득 비중 간 격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Ⅱ-35>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자영업 가구 소득과 지출을 실질화 한 것이다. 자영업 가구 평균으로 보면 실질경상소득이 실질가계지출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하위 20%를 보면 실질소득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경상소득은 1.1% 줄어들기까지 하였다. 반면 실질소비지출은 꾸준히 늘어나 가계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35> 1인당 실질 소득 및 지출 (전국 2인 이상 가구)

(천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3-'10 증감률
자영업 가구 평균	실질소득	722	747	757	772	806	794	797	856	18.7
	실질경상소득	694	716	722	736	764	761	765	813	17.1
	실질가계지출	632	652	664	684	705	683	681	724	14.5
	실질소비지출	515	530	540	554	568	549	543	575	11.6
최하위 20% 자영업 가구	실질소득	280	290	274	274	274	273	271	281	0.3
	실질경상소득	259	271	257	258	260	256	246	256	-1.1
	실질가계지출	403	411	408	400	410	421	412	424	5.4
	실질소비지출	340	349	347	341	349	362	348	358	5.3

주: 실질화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이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경상자료를 이용하여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보더라도 월소득 1분위 계층(하위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36>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에서 가처분소득[42]을 구한 후 불가피한 지출, 즉 보건, 교통, 통신, 정규교육에 대한 지출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1분위 근로자외가구(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은 2003년에 비해 2010년 87% 수준으로 상당 폭 줄어들었다.

42)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자료 소득액에서 조세, 연금, 사회보험 지출액을 공제하여 가처분소득을 산출하였다.

<표 Ⅱ-36> 경직적 지출액 공제 후의 가처분소득[1] 변동

(원, 배)

구분	항 목	2003(A)	2010(B)	B/A
월소득 1분위	전체가구	382,395	465,543	1.22
	근로자가구	631,035	850,085	1.35
	근로자외가구	198,632	173,180	0.87
월소득 10분위	전체가구	4,462,835	6,160,301	1.38
	근로자가구	4,700,421	6,233,857	1.33
	근로자외가구	4,093,296	6,061,769	1.48

주: 1) 소득-조세-연금-사회보험-보건비-교통비-통신비-정규교육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이상 가구)

마.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0.2%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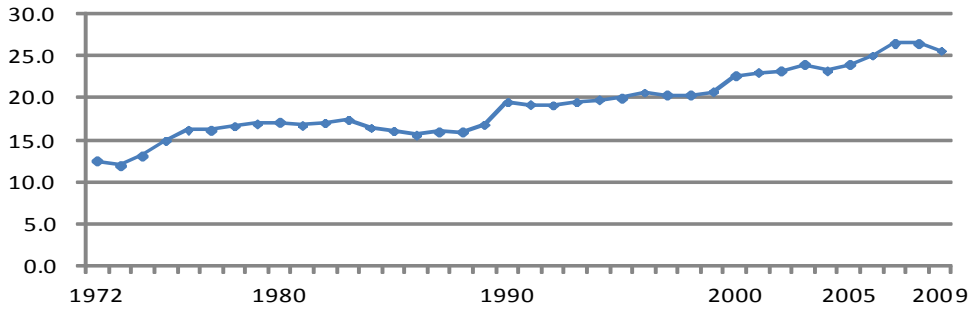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대비 조세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OECD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72년 12.5%에서 2009년 25.6%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 등 새로운 조세항목의 도입과 세정의 강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표 II-37> 조세부담률[1]

(%)

구분	1972	1980	1990	2000	2005	2009
OECD	12.5	17.1	19.5	22.6	24.0	25.6
통계청	-	-	17.0[2]	18.8	18.9	19.7

주: 1) 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OECD자료는 조세 총액에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
2) 1991년 수치



자료: OECD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대비 일반정부수입(조세+세외수입) 비중은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3년 23.0%에서 2010년에는 30.9%로 증가하였으나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8> GDP대비 일반정부 수입비중 국제비교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93	23.0	32.0	33.0	37.3	45.3	48.5	60.5	53.3
1997	24.8	31.7	34.6	38.4	45.7	50.8	59.0	54.5
2000	27.9	31.4	35.4	40.3	46.4	50.1	58.7	57.7
2003	29.4	30.5	31.3	38.7	44.4	49.1	54.4	55.5
2006	31.7	34.5	33.8	41.5	43.7	50.3	54.9	59.0
2010	30.9	32.5	31.6	40.7	43.4	49.1	52.7	56.5

자료: OECD

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21.2%에서 2010년 30.9%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39> GDP대비 정부총지출 비중 국제비교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93	21.2	34.5	38.1	45.3	48.3	55.0	71.7	54.7
1997	21.8	35.7	35.4	40.6	48.3	54.1	60.7	46.9
2000	22.4	39.0	33.9	36.6	45.1	51.6	55.1	42.3
2003	28.9	38.4	36.3	42.4	48.4	53.2	55.7	48.3
2006	27.7	36.2	36.0	44.3	45.3	52.7	52.7	40.6
2010	30.9	40.7	42.3	51.0	46.7	56.2	53.1	46.0

자료: OECD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0.2%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공공 사회지출비중은 7.5%였으며 민간 사회지출비중은 2.6%에 수준에 불과하였다. 공공 사회지출비중이 가장 낮은 멕시코와 유사하여 재정의 복지기능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약한 것이다.

<표 II-40> 지니계수 세전 세후 차이[1] 국제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85	-	0.04	0.10	0.11	0.19	0.08	0.21	0.13
1990	0.01	-	0.10	0.09	0.17	0.08	0.20	-
1995	0.01	0.08	0.12	0.12	0.19	0.20	0.23	0.16
2000	0.01	0.10	0.12	0.11	0.21	0.20	0.21	0.17
2005	0.02	0.12	0.11	0.11	0.21	0.20	0.20	0.17

주: 1)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자료: OECD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세구조에 있어 GDP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45] 선진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등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도 한 요인이 된 것 같다.

<표 II-41> GDP에 개인소득세가 차지하 비중 국제비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프랑스	9.8	7.5	7.5	7.4	7.9	7.7	7.4	7.5	7.3
독일	4.5	8.9	8.5	7.9	8.1	8.6	9.0	9.6	9.3
이태리	3.2	10.5	10.5	10.4	10.4	10.7	11.1	11.6	11.7
일본	7.0	4.8	4.5	4.7	5.0	5.2	5.5	5.6	5.4
한국	-	3.0	3.0	3.2	3.2	3.8	4.4	4.0	3.6
스웨덴	10.9	14.7	15.2	15.3	15.4	15.4	14.6	13.8	13.5
영국	10.6	10.4	9.9	10.0	10.4	10.6	10.9	10.7	10.4
미국	9.5	9.8	8.9	8.8	9.5	10.0	10.6	9.9	7.7
OECD 평균[1]	9.6	9.1	9.0	8.8	9.0	9.0	9.1	9.0	..

주: 1) 순평균
자료: OECD

45) 파이낸셜 타임스(2011.9.6.)는 2010년 현재 총 조세수입에서 개인소득세(personal taxation)의 비중이 한국(17.9%), 중국(25.4%), 일본(25.7%), 미국(24.3%), 영국(31.5%), 독일(34.8%), 프랑스(34.7%), 이태리(42.6%) 등으로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의료보험(1977년), 연금보험(1988년), 고용보험(1995년), 장기요양보험(2008년)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공공 사회지출은 GDP의 7.5% 수준으로 여전히 OECD 평균 20%보다 크게 낮다. 이는 우리나라가 노령인구 비중이 낮은 영향도 있지만, 의료 및 장기요양보험의 제한된 범위, 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바. 교육 격차

> 교육격차는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미래의 소득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정체되고 있다.

소득격차의 확대는 교육비 지출의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46] 계층간 교육비 지출액 차이는 미래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부담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표 Ⅱ-42>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 2010년 13.3%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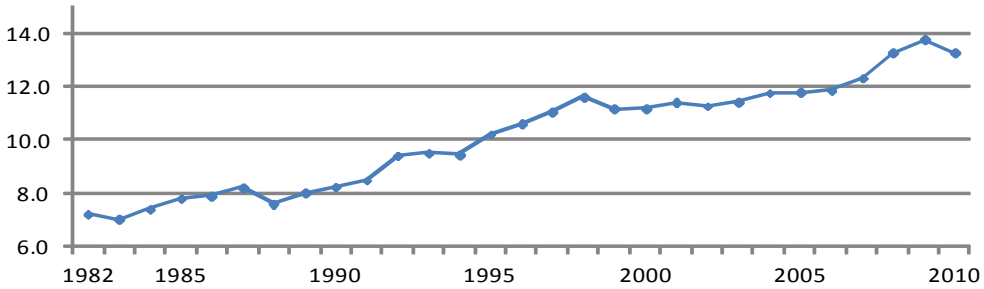
46)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교육비 지출률(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2년에는 7.2%였으나 2010년에는 13.3%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더욱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비 지출률이 크게 상승한 것은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대학진학률 증가, 해외유학비의 증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42> 도시가계의 교육비 지출률

(%)

구분	1982	1990	1995	2000	2005	2010
도시가계의 교육비 지출률	7.2	8.2	10.2	11.2	11.8	13.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우리나라 가계 교육비 증가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대학진학률 상승이다. <표 Ⅱ-43>의 우리나라 대학진학률[47]을 보면 1995년 41%에서 2007년에는 61%로 큰 폭 상승하였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평균 교육비는 미국, 칠레, 터키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8]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학 교육비가 교육비 지출 확대로 연결된 것이다.

<표 Ⅱ-43> 대학 진학률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1995	41	31	-	-	26	57	59
2000	45	40	43	47	30	67	67
2005	51	44	64	51	36	76	76
2006	59	45	64	57	35	76	67
2007	61	46	65	55	34	73	66

자료: OECD

47) 고등교육진학률 = (해당연령별 입학자수/해당 연령별 인구수)*100로 정의한다.
48) 2006-07년 대학 A형 정규학생 기준이며 등록금은 대학의 학비 면제와 학비에 대한 세금공제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았다. 출처: OECD(2010),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더구나 우리나라는 해외유학 연수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Ⅱ-44>와 같이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상의 유학연수비 지급액 추이를 보면 1993년의 3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44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무려 15배 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우리나라 가계지출이 명목기준 4.0배 증가에 그쳤으며 환율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7년까지 증가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아 주춤하였으나 다시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적투자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자녀 해외유학비가 적어도 중산층 이상 부유한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는 우리사회에서 세대간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Ⅱ-44> 우리나라의 유학연수비 지급액

(억$)

구분	1993	1997	2000	2003	2004	2005	2010
유학연수비 지급액	3.0	11.6	9.6	18.5	24.9	33.8	44.8

자료: 한국은행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계별 계층간 교육비 지출액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해 보았다. <표 Ⅱ-45>를 보면 2003년의 경우 교육비 지출 5분위 계수는 4.9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6.3으로 확대되었다. 저소득층(1분위)과 고소득층(5분위) 간 교육비 지출액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가계의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저소득층(1분위)은 2003년 7.1%에서 2010년 7.4%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고소득층(5분위)은 2003년 12.3%에서 2010년 15.1%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 교육비 지출 증가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Ⅱ-45>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액

(원, %)

구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1분위(a)	65,041 (7.1)	76,230 (7.8)	79,243 (7.8)	89,907 (8.2)	85,230 (7.9)	85,735 (7.4)
5분위(b)	319,420 (12.3)	382,293 (12.9)	404,168 (12.6)	468,047 (14.1)	535,368 (15.7)	542,946 (15.1)
b/a(배)	4.9	5.0	5.1	5.2	6.3	6.3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
2) ( )는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러한 현상은 정규교육과 학원교육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 Ⅱ-46>에서 정규교육비 지출액 변동을 보면 고소득층(5분위)은 2003년에 비해 2010년 현재 1.82배 증가한 데 반해 저소득층(1분위)은 1.39배 증가에 그쳤다. 그리고 학원비 지출액 변동을 보면 고소득층(5분위)은 2003년에 비해 2010년 현재 1.64배 증가한 데 반해 저소득층(1분위)은 1.22배에 증가에 그쳤다. 이와 같은 교육비 지출액의 차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소득불균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Ⅱ-46> 소득분위별 학생 학원비 지출액

(원)

월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03 (A)	2010 (B)	B/A
1분위	정규교육	28,269	39,257	1.39
	학원교육	31,316	38,213	1.22
5분위	정규교육	107,179	194,893	1.82
	학원교육	189,189	309,872	1.64

주: 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사. 급격한 고령화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하락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빈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가 재정부담 증가와 함께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인 고령화사회를 2000년에 맞았으며 이 비중이 14%인 2017년에는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이 비중이 20%가 넘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Ⅱ-47> 고령화 사 속도 국제비교

(년)

구분	도달 연도			도달 기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7%→14%	14%→20%
한국	2000	2017	2026	17	9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영국	1929	1976	2026	47	50
미국	1942	2015	2036	73	21

자료: 통계청(2006, 2011),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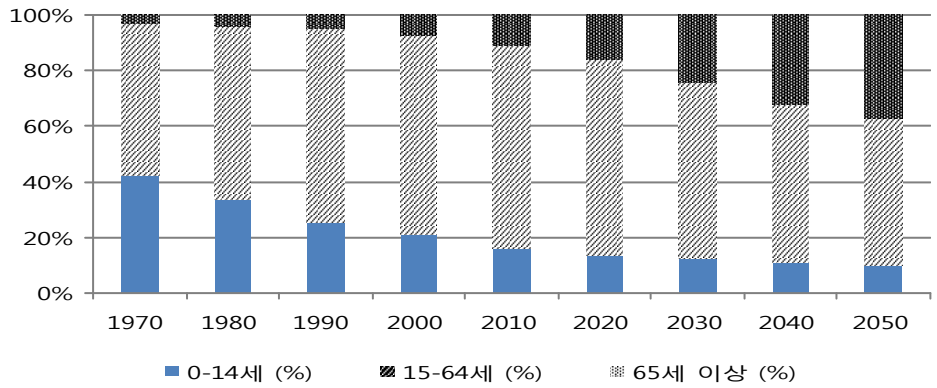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1.7%에서 2012~2014년 73.1%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63.1%, 2050년 52.7% 수준으로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표 Ⅱ-48>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

구분	1970	1990	2000	2010	2013	2020	2026	2030	2050
0~14세	42.5	25.6	21.1	16.2	14.7	13.2	12.9	12.6	9.9
15~64세	54.4	69.3	71.7	72.8	73.1	71.1	66.3	63.1	52.7
65세이상	3.1	5.1	7.2	11.0	12.2	15.7	20.8	24.3	37.4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KOSIS)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3.1%에 머물렀으나 2010년에는 11.0%로 상승하고 2050년에는 37.4%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70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17.7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었으나 2010년에는 6.6명으로 크게 줄고 2050년에는 1.4명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표 II-49> 노인 1명 부양에 필요한 생산가능인구

구분	15-64세(%, A)[1)]	65세이상(%, B)[1)]	A/B(명)
1970	54.4	3.1	17.7
1980	62.2	3.8	16.3
1990	69.3	5.1	13.5
2000	71.7	7.2	9.9
2010	72.8	11.0	6.6
2020	71.1	15.7	4.5
2030	63.1	24.3	2.6
2040	56.5	32.3	1.7
2050	52.7	37.4	1.4

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인구(2011)

이처럼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출산율이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그동안 보건이 향상되면서 1990년 71.4세에서 2008년 79.9세로 크게 증가하였다.[49)]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아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증가율은 매우 빨랐는데 2008년 현재 기대수명은 영국, 독일과 비슷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는 우리나라 보다 기대수명이 다소 긴 반면 미국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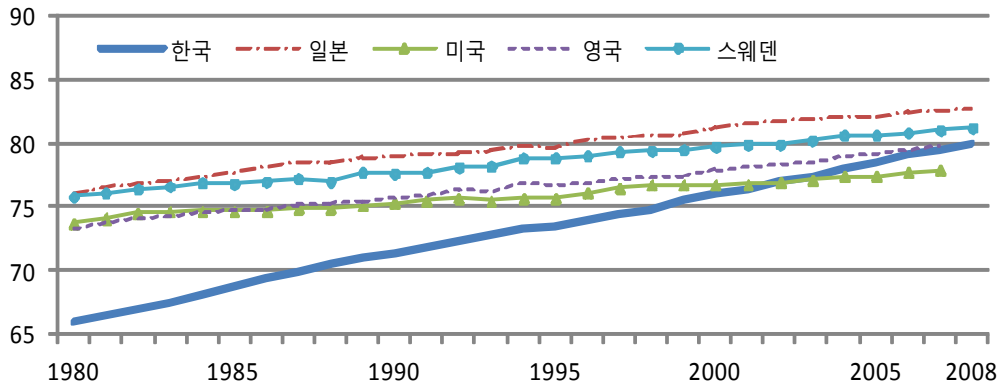
49)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70년 기대수명은 61.9세였으며 2010년 기대수명은 80.6세로 나타났다.

<표 Ⅱ-50>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세)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90	71.4	78.9	68.1	75.3	75.7	75.3	76.9	77.6	76.6
1995	73.5	79.6	69.6	75.7	76.7	76.6	77.9	78.8	77.8
2000	76	81.2	71.3	76.7	77.9	78.2	79	79.7	78.7
2005	78.5	82	72.6	77.4	79.1	79.4	80.3	80.6	80.1
2008[1)]	79.9	82.7	73.1	77.9	79.7	80.2	81	81.2	80.6

주: 1) 미국과 영국은 2007년
자료: OECD



그러나 출산율은 하락하였다. <표 Ⅱ-51>을 보면 가임기간(15세~45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90년대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10년 현재 1.2%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50)]

50)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1960년 4.2%에서 2010년에는 0.3%로 크게 하락하였다.

인구증가율

(%)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인구증가율	4.2	2.2	1.6	1.0	0.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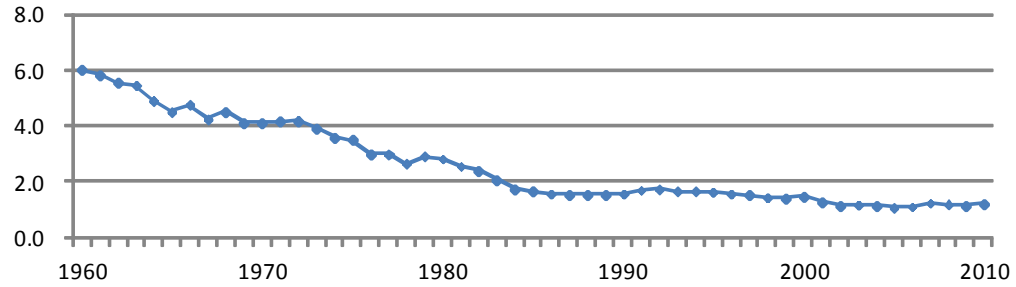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표 II-51> 우리나라의 출산율

(명)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출산율	6.0	4.5	2.8	1.6	1.5	1.1	1.2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이처럼 출산율이 급감하게 된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더불어 보육시설의 미흡, 자녀 교육비 등 육아비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값의 상승으로 내집 마련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결혼과 자녀 출산을 미루게 되는 것도 출산율을 낮게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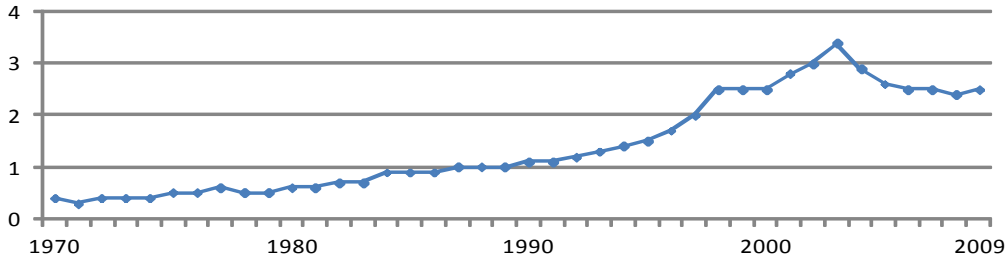
출산율 둔화는 이혼율 급증에서도 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1년간 발생한 총이혼 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로 나타내는 우리나라 가정의 이혼율은 1970년 0.4건에서 2010년에는 2.5건으로 6배 이상 상승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03년 3.4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I-52> 우리나라의 이혼율

(천명당)

구분	1970	1980	1985	1990	2000	2010
이혼율	0.4	0.6	0.9	1.1	2.5	2.5

자료: 통계청



이혼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 비해서는 높았다.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고 대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II-53> 이혼율 국제비교[1)]

(천명당)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대만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85	0.9	1.4	-	3.1	1.1	1.9	2.4	2.0
1990	1.1	1.3	9.4	2.9	1.3	1.9	2.3	2.4
1995	1.5	1.6	8.8	2.9	1.6	2.1	2.6	2.4
2000	2.5	2.1	8.2	2.6	2.4	1.9	2.4	2.2
2005	2.6	2.0	7.2	2.6	2.7	2.5	2.2	2.4

주: 1) 한국은 천명당 이혼율. 한국외의 국가들은 이혼건수/총인구로 계산
자료: 한국은 통계청, 대만은 대만통계청, 그 외는 OECD

한편 최근 연령대별 이혼율을 보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혼율 급증이 출산율 하락과 크게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54> 우리나라의 이혼 연령별 인구 분포

(%)

구분	1992	2000	2009
25-29세	25.5	17.7	9.7
30-34세	29.6	22.5	15.9
35-39세	18.4	22.6	20.4
40-44세	8.4	17.3	18.9
45-49세	4.2	7.9	15.4
50-54세	2.1	3.5	8.9

자료: 통계청

아. 노인문제 악화

우리사회는 급속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 부족과 연금 등 국가의 노인복지제도가 미흡하여 노인층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최고이며 이는 노인빈곤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09년 현재 십만명당 78.8명으로 15~64세 자살률 31.2명보다 2.5배 이상 많다. 노인 중에서도 65~79세 자살률보다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1.7배를 상회하여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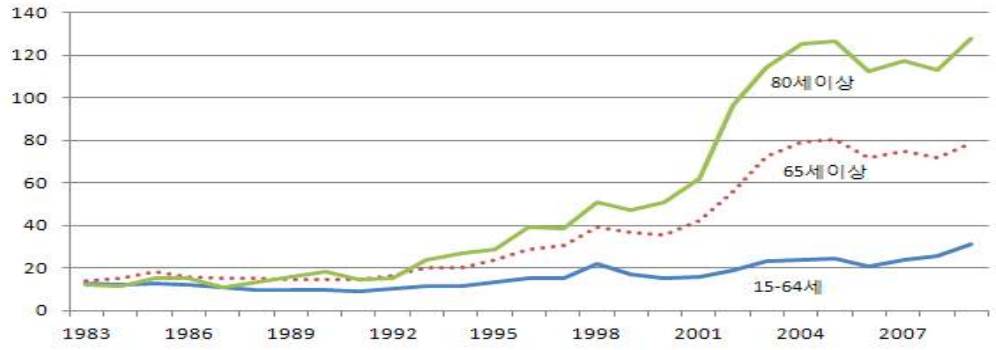
연도별로 자살률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이후에 특히 많이 높아져 노인자살률에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55> 노인(65세이상) 자살률

(십만명당)

구분	전체	15~64세	65세 이상	65~79세	80세이상
1983	8.7	12.5	14.1	14.5	12.3
1990	7.6	9.7	14.3	13.4	18.2
1995	10.8	13.1	23.6	23.7	28.5
1998	18.4	21.8	39.4	38.9	50.8
2000	13.6	15.3	35.5	35.3	51.0
2005	24.7	24.4	80.3	75.3	126.7
2009	31.0	31.2	78.8	73.2	127.7

주: 통계의 일관성 확보와 국제비교 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난 24년간(1983-2007년)의 집계방식 일화 등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로 기존의 공표자료와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자살 이유로는 2010년 기준으로 질환장애가 40.3%, 경제적 어려움이 30.4%, 외로움 및 고독이 12.6%를 차지하였다. 노인적 특성인 질환장애를 제외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표 II-56> 노인(65세이상) 자살 이유

(%)

구분	경제적 어려움	질환 장애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이성 문제	기타	합계
2008	29.3	40.8	14.2	10.4	0.8	4.5	100.0
2010	30.4	40.3	12.6	6.6	2.9	7.2	100.0
(전체)[1)]	38.8	11.2	12.9	15.1	3.5	18.5	100.0

주: 1) 전인구 자살 이유임
자료: 통계청, 『2008년 사회조사보고서』, 『2010년 사회조사보고서』

한편 6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유병일수(days of sickness)가 1999년 7.9일에서 2008년에는 10.4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병일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 건전성을 압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1999년 1.9조원에서 2009년에는 12.0조원으로 6.3배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무려 13.8조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총액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5년 대비 2010년 현재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향후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 1인당 진료비는 한 해 276.9만원에 달하여 국민 1인당 진료비 89.3만원에 비해 세 배가 넘어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 의료행위가 노인보건의 주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한다.[51]

<표 II-57> 노인의료비 비중

(%)

구분	1995	2000	2005	2007	2010
노인의료비 비중	12.2	17.4	24.4	28.2	31.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각년도

이처럼 고령화에 따라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노인이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로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58> 연령층별 주당 총 실근로시간(2010년)

(시간, %)

구 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19세이하	31.2	44.4	29.3 (66.0)
20~29세	42.2	44.1	37.2 (84.2)
30~39세	43.2	44.1	38.2 (86.7)
40~49세	43.6	45.3	37.4 (82.5)
50~59세	43.9	46.0	38.7 (84.2)
60세이상	44.4	46.4	42.2 (91.0)
전 체	43.1	44.8	37.8 (84.5)

주: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51) 매일경제신문, ‘대한민국 은퇴보고서 시리즈’, 2011.8.17일자

그렇지만 시간당 임금은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40대(16,669원)를 정점으로 낮아지며, 비정규직은 30대(9,653원)를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다.

<표 II-59>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원, %)

구 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19세이하	5,029	6,625	4,803 (72.5)
20~29세	9,450	10,414	6,989 (67.1)
30~39세	14,099	14,921	9,653 (64.7)
40~49세	15,044	16,669	9,199 (55.2)
50~59세	13,666	15,644	8,769 (56.1)
60세이상	9,165	10,940	7,177 (65.6)
전 체	12,878	14,388	8,236 (57.2)

주: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기준(1인가구 제외) 노인빈곤율(65세 이상)은 1989년 11.0%에서 2009년 27.2%로 늘어났다. 지난 20년 동안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특히 199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급증한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빈곤층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60> 노인빈곤율[1)]

(%)

구분	1989	1995	1997	2000	2003	2005	2009
노인빈곤율	11.0	13.2	16.6	19.8	23.4	21.3	27.2

주: 1) 도시근로자기준 1인가구 제외,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인구비중
자료: 보건복지백서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5.1%[5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전체 30개 국가 평균 13.5%에 비해 약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부부보다는 독신의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61> OECD 노인빈곤율(2000년대 중반)[1]

(%)

구분	전체 (65+)	나이별		성별		가구특성별	
		66~75	75세+	Men	Women	Single	Couple
한국	45.1	43.3	49.8	41.8	47.2	76.6	40.8
호주	26.9	26.1	28.3	24.6	28.9	49.9	17.7
캐나다	5.9	5.2	6.8	3.1	8.1	16.2	3.9
핀란드	12.7	8.2	19.5	6.5	16.9	28.0	3.9
프랑스	8.8	7.2	10.6	6.6	10.4	16.2	4.1
독일	8.4	6.5	11.1	5.1	10.8	15.0	4.7
일본	22.0	19.4	25.4	18.4	24.7	47.7	16.6
영국	10.3	8.5	12.6	7.4	12.6	17.5	6.7
미국	22.4	20.0	27.4	18.5	26.8	41.3	17.3
OECD	13.5	11.7	16.1	11.1	15.2	25.0	9.5

주: 1) 가처분소득 기준, 자영업자소득 포함, 가구사이즈에 따른 균등화 처리
자료: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p.149

노인인구의 주 수입원인 연금수령액은 1인당 1989년 102천원에서 1997년 1,511천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2,697천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연금의 절대규모가 작아 총소득이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가구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9년 37.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2> 1인당 연금수급액[1]

(천원)

구분	1989	1995	1997	2000	2003	2005	2009
전체	102	862	1,511	1,733	1,991	2,040	2,697
(노령연금)	-	983	1,318	1,351	1,870	1,876	2,706

주: 1) 연금총액을 총연금수급자로 나누어 계산
자료: 보건복지백서

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포함 도시 전가구 노인빈곤율은 2006년 45.9%, 2009년 48.3%로 OECD 통계와 다소 다른데 이는 OECD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일부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 등 공적부조는 크게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공적부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에 지나지 않아 OECD국가 중 핀란드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표 II-63> OECD 국가의 소득 원천(mid-2000s)

(%)

구분	Public transfers[1]	Work[2]	Capital[3]	합계
Finland	14.9	11.2	73.9	100.0
Korea	15.2	58.4	26.4	100.0
Mexico	21.4	54.4	24.3	100.0
United States	35.4	34.3	30.3	100.0
Australia	44.6	19.4	35.9	100.0
Turkey	46.3	40.9	12.8	100.0
Canada	46.7	13.4	39.9	100.0
Switzerland	48.1	11.8	40.1	100.0
Japan	48.3	44.4	7.3	100.0
Netherlands	48.4	9.8	41.8	100.0
United Kingdom	49.8	11.9	38.3	100.0
Ireland	53.6	20.9	25.4	100.0
Denmark	56.8	11.5	31.7	100.0
Iceland	61.4	28.5	10.1	100.0
Norway	61.7	11.2	27.1	100.0
New Zealand	64.4	15.1	20.5	100.0
Portugal	66.1	29.0	4.8	100.0
Greece	66.5	25.5	8.0	100.0
Sweden	70.0	9.0	21.0	100.0
Spain	70.8	24.1	5.1	100.0
Italy	72.5	23.6	4.0	100.0
Germany	74.9	9.9	15.2	100.0
Czech Republic	75.9	23.6	0.5	100.0
Poland	78.4	20.6	1.0	100.0
Luxembourg	79.3	12.0	8.7	100.0
Austria	79.4	19.1	1.5	100.0
Belgium	81.1	11.8	7.1	100.0
Slovak Republic	82.5	17.1	0.4	100.0
Hungary	85.6	11.8	2.6	100.0
France	86.7	6.4	6.9	100.0
OECD 평균	59.6	21.4	19.1	100.0

주: 1) Earnings-related pensions, resource-tested benefits, etc
2) 자영업자 근로소득 포함
3) Capital income includes private pensions as well as income from the returns on non-pension savings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p 147

자. 범죄율 및 자살률 급상승

소득수준은 올라갔지만 범죄율, 자살률 등이 급상승하고 있다. 살인 건수는 1985년 600건에서 2009년에는 1,390명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자살률은 일본을 크게 추월하여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자살률 급증이 자살률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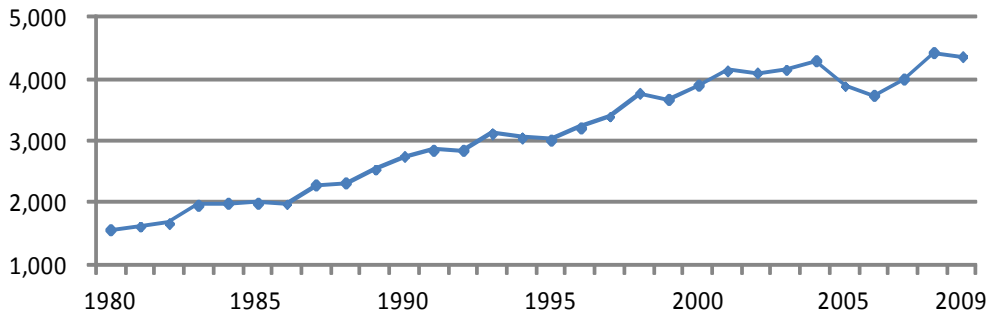
지난 약 20년간 우리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범죄율, 자살률 등 각종 사회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건수는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가령 1980년에는 인구 십만명당 1,561건의 범죄발생에서 1990년 2,741건, 2009년에는 4,356건으로 급증하였다.

<표 II-64> 범죄 발생건수

(십만명당)

구분	1980	1990	2000	2004	2006	2009
범죄 발생건수	1,561	2,741	3,893	4,283	3,734	4,356

자료 : 대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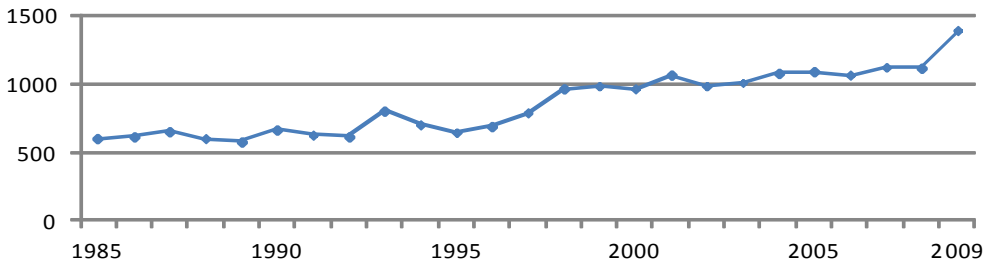
강력범죄인 살인 건수는 1985년 600건에서 2009년에는 1,39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소득불균등의 확대와 사회적 스트레스 심화가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표 II-65> 살인 건수

(건)

구분	1985	1990	1995	1998	2000	2005	2009
살인 건수	600	666	646	966	964	1,091	1,390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자살자 수는 1983년 3,471명에서 2009년에는 15,413명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증가, 경쟁격화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 심화와 생활고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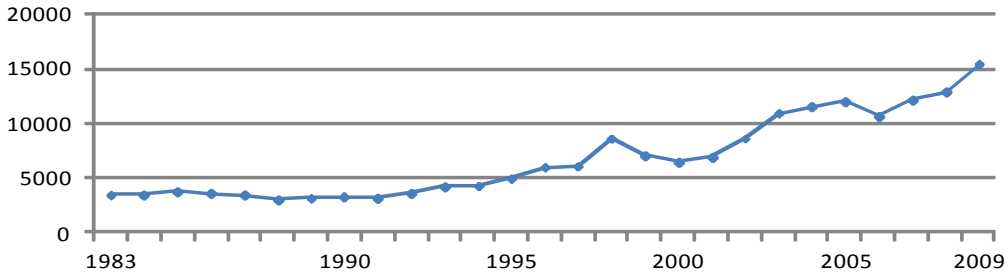
<표 II-66> 자살자 수

(명)

구분	1983	1990	1995	2000	2005	2009
자살자 수	3,471	3,251	4,930	6,444	12,011	15,413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53) 신동준(2007),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사회정의시민행동 심포지엄자료집(한국사회와 자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9년 현재 일본보다 높으며 미국, 영국, 노르웨이 보다 2~3배 높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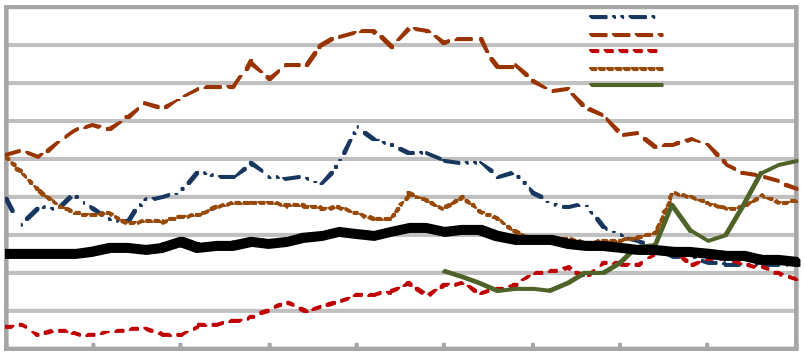
<표 II-67> 자살률[1] 국제비교

(명)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대만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85	9.3	19.4	12.3	9.0	11.9	22.5	18.2	14.1
1990	7.6	16.3	12.4	8.1	6.7	20.0	17.2	15.5
1995	10.9	17.2	11.9	7.4	7.6	20.6	15.3	12.6
2000	13.7	24.1	10.4	7.5	11.1	18.4	12.7	12.1
2005	25.0	24.2	11.0	6.7	18.8	17.6	13.5	11.5
2009	31.0	24.4	-	6.9	-	16.3[2]	12.7[2]	11.9

주: 1) 10만명당 자살자수 2) 프랑스는 2007년, 스웨덴은 2008년 수치
자료: 통계청(한국), 대만 통계청(대만), WHO(그 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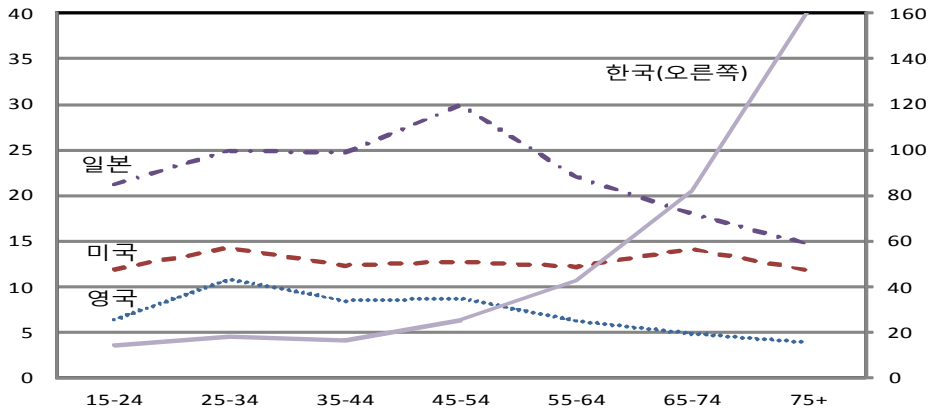
<그림 Ⅱ-11> OECD 국가 평균 및 우리나라 자살률(명)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2009

우리나라 자살률 상승은 노인자살률 급증에 크게 기인한다. OECD가 작성한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74세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8명으로 일본(17.9명)과 미국(14.1명)에 비해 4~5배에 달하고 OECD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5배나 높다.[54]

<그림 Ⅱ-12> OECD 국가별 연령별 십만명당 자살률(명)



54)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2009. 별도제공 EXCEL 파일

Ⅲ.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1. 소득불균등과 여타 사회지표들 간의 관계

사회지표 중 자살률, 범죄율, 이혼율 등 사회적 갈등지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살률에 대해 소득분배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삶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가 현저히 낮을 경우 자살과 같은 극 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삶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소득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상당부분 결정된다.[55]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확대될수록 저소득 및 빈곤층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면서 자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득불균등과 자살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와 자살률과의 관계를 <그림 Ⅲ-1>을 통해 도시해 보면 자살률과 지니계수 수준 변수들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추세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두 변수 증가율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 Ⅲ-1>에서도 자살률과 소득분배지수 변동률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균등의 상승이 자살률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분배의 악화는 살인 등 범죄율을 높일 수 있다.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개인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한 불만감의 증가는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득불균형과 범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한편 범죄율의 상승이 소득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두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56]

---

55) 경제모형에서는 이를 external habit formation 형태의 효용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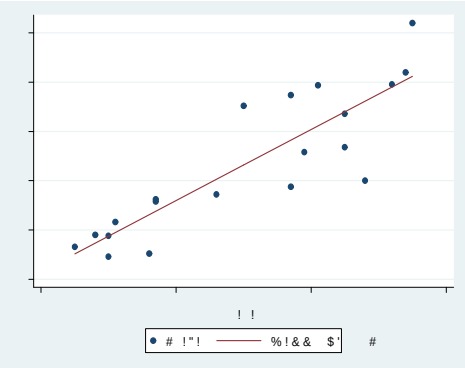
56) 대검찰청 DB '2010년 범죄개관'에 따르면 절도, 강도, 살인, 방화 등 주요 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다. 이와 같이 범죄자는 대부분 저소득자 계층이 많으며 재산범죄, 강력범죄 등의 검거율도 높다(대검찰청 통계 DB 참조). 따라서 범죄자는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범죄율의 상승은 소득불균등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대부분의 강도 및

<그림 III-1>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불균등과 살인율 수준 변수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으며 <표 III-1>에서도 소득불균등과 살인율 변동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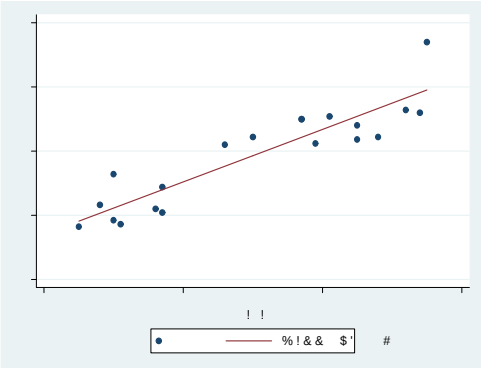
1990년~2009년간의 사회지표 증가율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로 실증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샘플 수가 많지 않아 추정결과를 엄밀히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추정결과를 보면 사회지표들이 소득분배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불균등 확대가 자살률과 살인 등 범죄율을 상승시켜 사회후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57]

<그림 III-1> 우리나라 소득불균등(X축)과 자살률 및 범죄율(Y축)간 산포도

(자살률)



(살인율)



절도로 인한 피해규모는 소액이기 때문에 소득불균등을 개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7) 추정기간은 1990년~2009년이며 각 추정식의 샘플 수는 20개이다. 두 변수 증가율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며 각 추정식에서 지니계수의 추정치가 모두 5%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살률t = 1.05 + 84.62*지니계수t (2.04) (1.94) 추정기간: 1990~2009년, 관측치수: 20, $\overline{R^2}$=0.07	살인율t = 0.05 + 9.58*지니계수t (1.14) (4.57) 추정기간: 1990~2009년, 관측치수: 20, $\overline{R^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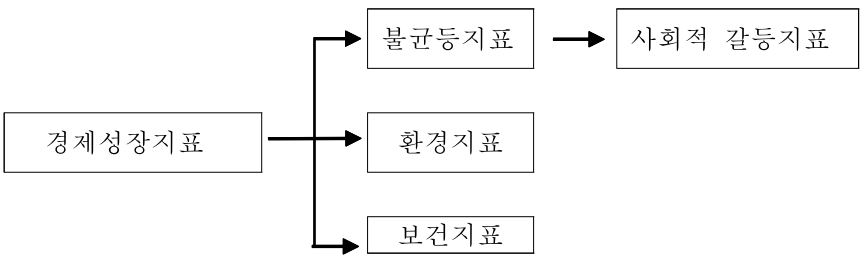
<표 III-1> 우리나라 소득불균등 변동과 사 지표 변동 간 시차상관계수

$$Correlation(Gini_t, SI_{t+m})$$

m \ SI	자살률	살인율	이혼율
+2	-0.142	0.142	0.058
+1	-0.268	-0.280	-0.086
0	0.342	0.444	0.181
-1	0.051	-0.021	0.122
-2	-0.234	-0.311	-0.243

사회지표 중 보건과 환경의 경우 주로 경제성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변수로 볼 수 있다. 보건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개선되며 환경은 경세성장 초기에는 공해배출 등으로 악화되었다가 성숙 계에 오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살률과 범죄율과 같이 국민후생 및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지표들이 소득불균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을 완화하는 경우 여타 사회갈등지표들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 절에서 소득불균등 완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림 III-2>는 앞서 논의한 바에 따라 경제성장지표와 사회지표들간에 영향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III-2> 각 지표들 간 영향관계



2.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에 관한 논의

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불균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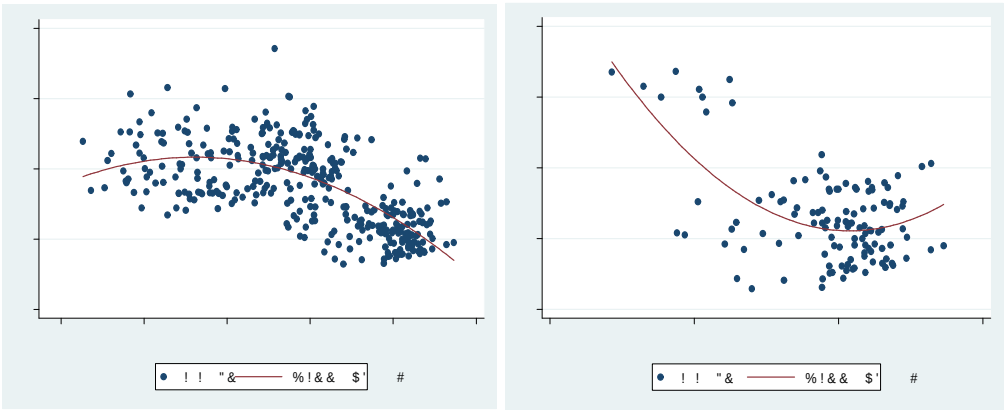
경제성장은 소득불균등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부정적 영향을 보면,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가 소득불균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로 순노동투입에 의해 생산되는 필수재 및 저가 상품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숙련노동의 투입을 통해 생산되는 사치재 및 고급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숙련노동 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의 긍정적 영향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성숙경제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보다는 소득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잉여소득이 많으므로 세금부과를 통해 소득지원을 위한 재정확충이 용이하기 때문에 조세 및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수록 고용이 촉진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Kuznets는 역 U자 가설을 제기하면서 성장 초기에는 소득불균등이 악화되나 성숙경제에서는 소득불균등이 완화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경제발전초기에는 물적자본 축적이 성장의 주된 요인이므로 물적자본 축적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유층의 자본형성을 정부가 지원한다. 성숙경제에서는 인적자본이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적자본의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불균등이 완화된다고 한다.

<그림 III-3>은 전세계 108개 국가 및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소득수준(PPP 기준)과 소득불균등 정도를 비교해 본 것이다. 각 국가의 시계열은 1960년부터 2005년까지 매 5년 주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세계 국가를 사용한 경우 두 변수 간 관계가 대체로 역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58] 반면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OECD 국가만 대상으로 두 변수 간 관계를 보면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59]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일부 국가들에서 소득불균등 정도가 상승하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 부유층의 소득이 매우 높음에 따라 소득불균형 정도가 높아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60] <그림 III-3>을 보면 대체로 두 변수 간 우하향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소득불균등의 완화와 관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 일인당 소득수준(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전체국가) (OECD 국가)



주: 전세계 108개국을 대상으로 도출한 것이며 일인당 소득 수준은 원자료에 로그를 취한 것임

58) 두 변수 간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며 모든 추정계수가 1%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underset{(-4.36)}{-132.1} + \underset{(6.58)}{46.07}*\text{일인당소득}_{i,t} - \underset{(-7.54)}{3.03}*(\text{일인당소득}_{i,t})^2$$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365개, $\overline{R^2}$=0.43

59)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며 모든 추정계수가 1%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underset{(5.03)}{912.5} - \underset{(-4.72)}{176.9}*\text{일인당소득}_{i,t} + \underset{(4.53)}{8.78}*(\text{일인당소득}_{i,t})^2$$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118개, $\overline{R^2}$=0.33

60) 초고소득국가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인적자본과 소득불균등

교육수준, 인적자본 등이 소득불균등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 개인들의 부는 일반적으로 교육 및 인적자본을 통해 창출되거나 자본의 보유를 통해 창출된다.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인적자본이 용이하게 축적되는 경우 기회의 형평성 정도가 높아지면서 소득불균형 정도가 완화된다. 한편 물적자본은 인적자본에 비해 상속이 용이하므로 부의 창출에 있어 인적자본 보다 물적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등이 높아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들간에 인적자본의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물적자본의 소유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교육 및 인적자본을 통해 창출되는 부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4>를 통해 전세계 및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평균 교육년수와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보면 교육년수가 길수록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61] 이는 교육이 강화된 나라에서 소득불균등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교육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졸자가 하향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이 다수

61)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내의 값은 t값이며 추정계수가 1%이내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text{지니계수}_{i,t} = \underset{(37.63)}{54.13} - \underset{(14.65)}{2.95} * \text{평균교육년수}_{i,t}$$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293개, $\overline{R^2}$=0.42

OECD 국가의 경우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내의 값은 t값이며 추정계수가 1%이내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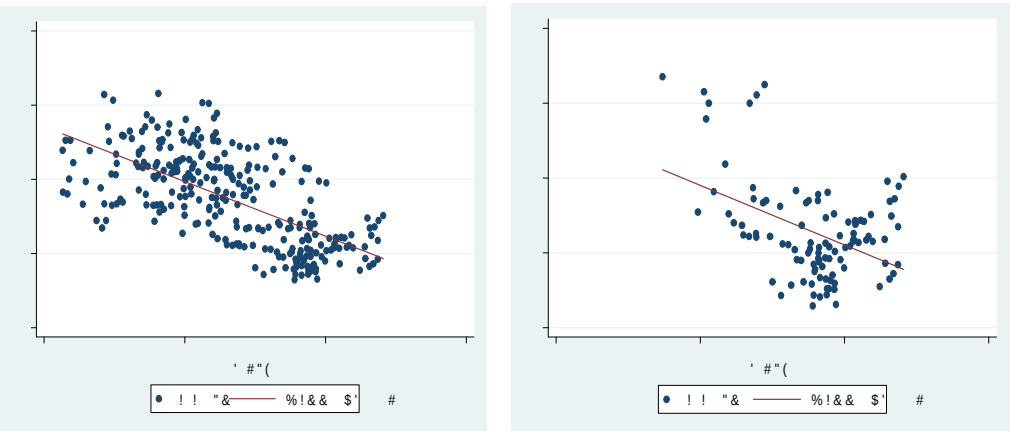
$$\text{지니계수}_{i,t} = \underset{(12.33)}{36.95} - \underset{(-4.85)}{1.59} * \text{평균교육년수}_{i,t}$$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103개, $\overline{R^2}$=0.19

존재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평균 교육년수는 외국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III-4> 평균 교육년수(X축)와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전체국가) (OECD 국가)



다. 경제개방의 확대

일반적으로 경제개방의 확대는 기술변화와 더불어 소득불균등 확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Jaumotte Lall and Papageorgiou(2008) 참조). 세계화 추이와 더불어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상품시장개방의 효과를 보면 첫째, 저가 노동집약적 외국상품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심화된다. 둘째, 경쟁력이 높은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출이 증대되면서 숙련노동자의 소득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의 경영안정성이 저하[62]됨에 따라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62) 경제성장으로 민간자율경영이 중시되면서 기업에 대한 정부보호가 철 된 점도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개방효과를 보면, 첫째, 저임금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확대된다. 둘째, 우수두뇌의 국외유출이 증대되면서 국내 숙련노동 및 전문직 노동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부문의 임금 및 소득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금융시장 개방 효과를 보면 첫째, 해외 금융 및 실물자산 투자기회가 확대되면서 고자산가의 소득이 더욱 증가한다. 둘째, 공장의 해외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와 노조운동이 쇠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해외자금의 신흥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상승한다. 이는 기업 및 금융기관 경영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주주이익중시 경영관행을 확산시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유연성 확대 및 하청업체 압박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경제개방의 확대로 인한 소득불균등 변화 효과를 감안하면 국내시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소득불균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인구가 많아 국내시장의 크기가 큰 국가의 경우 상품,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개방도와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그림 III-5>를 통해 보면 대체로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균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3] 그러나 OECD 국가만 대상으로 해서 두

63) 두 변수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며 두 추정계수가 모두 1%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32.32 + 0.037 * \text{무역개방도}_{i,t}$$
$$(30.16) \quad (2.87)$$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365개, $\overline{R^2}$=0.02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다. 두 추정계수가 모두 1%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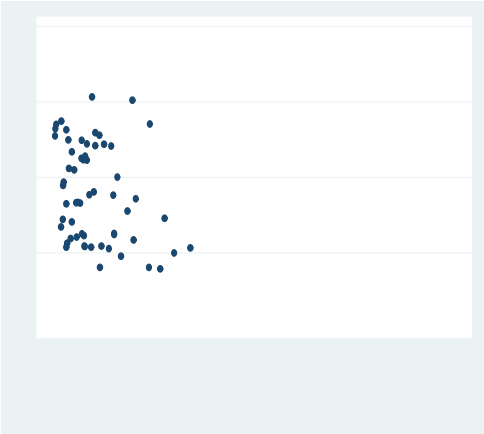
$$\text{지니계수}_{i,t} = 26.81 - 0.072 * \text{무역개방도}_{i,t}$$
$$(20.37) \quad (3.19)$$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118개, $\overline{R^2}$=0.08

변수 간 관계를 보면 무역개방도의 상승이 소득불균등 확대와 관계없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역개방도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크기 효과를 통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I-5> 무역개방도(X축)와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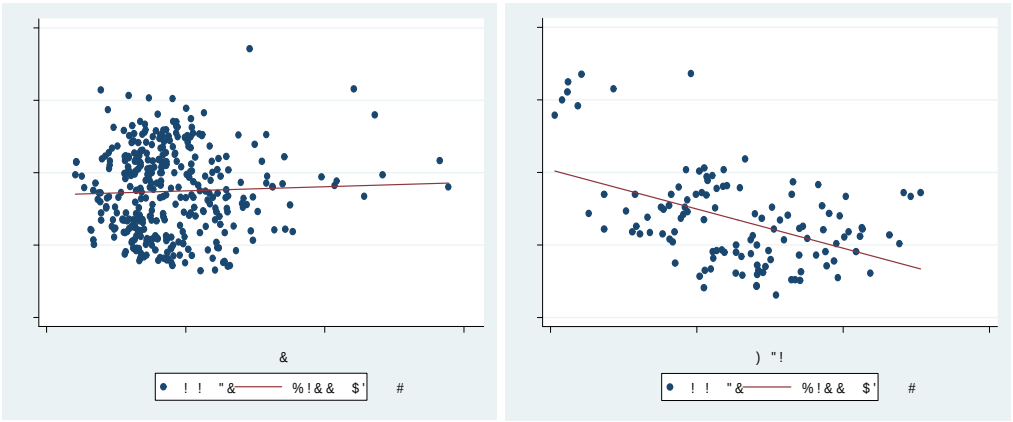
(전체국가) (OECD 국가)



정도를 보면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64] 한편 OECD 국가의 경우를 보면 정부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이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65]

<그림 III-6> 정부지출비중(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전체국가) (OECD 국가)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과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해 소득불균등을 완화해 나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불균등 완화를 위해서는 조세부분의 역할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

64)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다. 정부지출비중 추정계수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33.83 + 0.057 * \text{정부지출비중}_{i,t}$$
$$(21.89) \quad (0.71)$$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365개, $\overline{R^2}$=-0.00

65) OECD를 대상으로 한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다. 추정계수가 모두 1%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30.92 - 0.506 * \text{정부지출비중}_{i,t}$$
$$(15.43) \quad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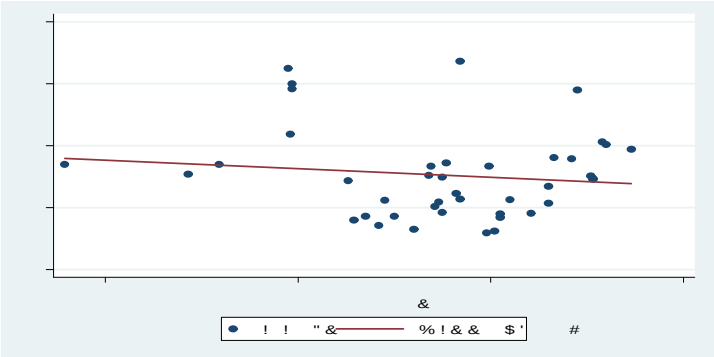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118개, $\overline{R^2}$=0.13

특히 세금 징수 및 납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징세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

마. 직업 안정성의 저하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갖고 있는 가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다. 이에 따라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의 비중이 확대될수록 소득의 불균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상용직 비중과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그림 III-7>을 통해 보면 상용직 비중이 상승할수록 소득불균등 정도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본수가 다소 부족한 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66]

<그림 III-7> 상용직비중(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OECD)



66) 두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다. 정규직 비중의 추정계수는 10%내에서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37.27 - 0.14 * \text{정규직비중}_{i,t}$$
$$(2.43) \quad (-0.79)$$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42개, $\overline{R^2}$=-0.00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간 소득의 불균등 정도는 근로소득자 간 소득의 불균등 정도보다 높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낮다. 이에 따라 경제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소득불균등 정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각국의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도시한 <그림 Ⅲ-8>을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소득불균등 정도도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7]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국들에 비해 임시직 및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Ⅲ-8> 자영업자비중(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전체국가) (OECD 국가)

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 간 소득의 강제적 이전을 통해 분배체계를 왜곡시킴에 따라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지만 대체로 조정되는데 시차가 있으며 그 반영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경우 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명목 GDP 증가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부유층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실물자산의 보유 등을 통해 손실이 크지 않게 된다. 아울러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의 경우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는 주체이므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이익을 보게 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면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투자로 수익을 얻기 위한 투기 행태가 만연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은 소득불균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과 지니계수 간 관계를 도시한 <그림 III-9>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 소득불균등도 대체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68] 그러나 추정계수 값이 매우 작아 인플레이션의 소득불균등에 대한 영향력은 실제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Bulir(2001)는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면 소득불균등이 뚜렷이

68)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다. 인플레이션율 추정계수는 5%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34.85 + 0.007 * \text{인플레이션율}_{i,t}$$
$$(55.02) \quad (2.17)$$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343개, $\overline{R^2}$=0.01

OECD국가들 대상으로 한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다. 인플레이션율 추정계수는 1%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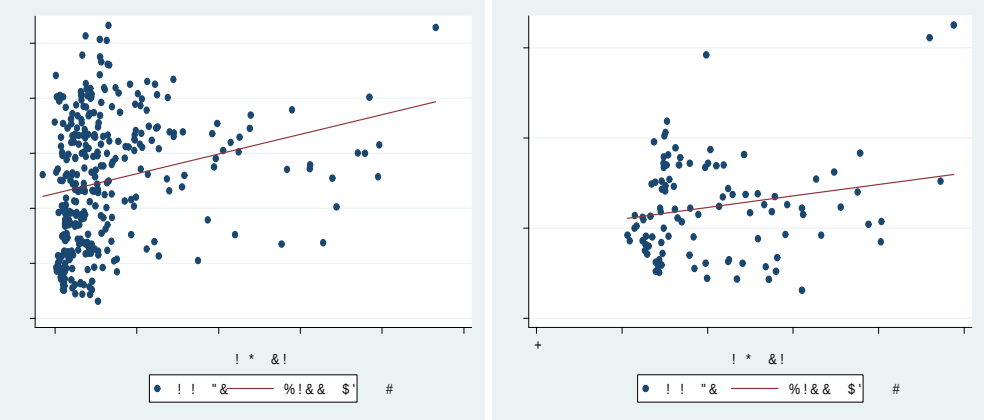
$$\text{OECD국 지니계수}_{i,t} = 22.21 + 0.107 * \text{인플레이션율}_{i,t}$$
$$(33.31) \quad (3.88)$$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113개, $\overline{R^2}$=0.11

개선되나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추가로 낮아지는 것은 소득불균등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추정결과를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10%이상이면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10%이하에서 변동하는 경우에는 소득불균등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9]

<그림 III-9> 인플레이션율(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전체국가) (OECD 국가)



사. 자본소득의 비중 증가

일정기간동안 한 국가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형태로 배분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내 자본소득의 불균등은 근로소득의 불균등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국가들에서 근로소득과 임금소득을 합한 소득지니계수가 약 0.2~0.4 사이에 있는 반면 자산지니계수는 0.6~0.9 사이에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70](<표

69)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는 t값이다. 설명변수 중 고(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이 10%이상(이하)이면 인플레이션율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고인플레이션율 변수와 상수항만 1%이내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지니계수$_{i,t}$ = 35.08 + 0.007*고인플레이션율$_{i,t}$ - 0.237*저인플레이션율$_{i,t}$
(42.14) (2.68) (-1.20)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368개, $\overline{R^2}$=0.01

II-10과 II-11 참조) 이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 전체 부가 노동소득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소득불균등 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직접적인 경로 외에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자본소득비율의 상승이 소득불균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산보유의 차이로 인해 부의 불균등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강화되고 신분상승기회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서민들의 근로의욕과 인적자본 개발의욕이 저하되면서 소득불균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간 산포도를 도시하면 두 변수 간에 우하향하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71] 이는 앞서 한 국가내에서 근로소득보다 자산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불균등이 확대된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한편 경제내 자산소득 비중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의 상승, 재산상속 및 증여의 확대 등에 의해서도 확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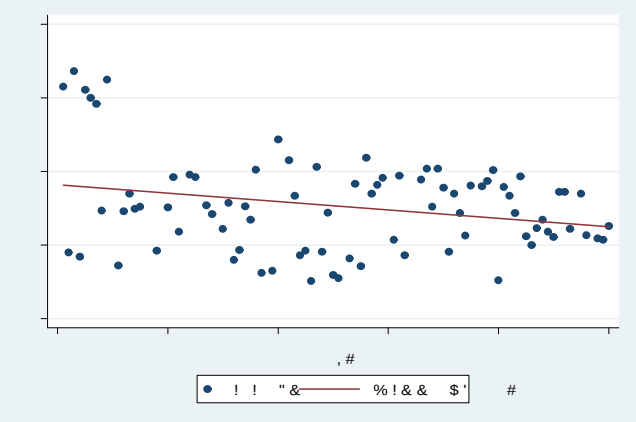
---

70) 각 개인이 보유한 자산에서 α% 만큼이 자산소득으로 창출된다고 하고 α가 개인들간에 동일하다고 보면 자산보유의 불균등과 자산소득의 불균등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서민의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대부분이지만 부유층의 경우 펀드, 부동산투자, 주식배당 등을 통해 금융기관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자산소득의 불균등 정도는 자산보유의 불균등 정도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71) 두 변수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며 모든 추정계수가 1%이내에서 유의하였다.

지니계수$_{i,t}$ = 36.87 - 23.20*노동소득분배율$_{i,t}$
(7.76) (-2.86)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65개, $\overline{R^2}$=0.18

<그림 III-10> 노동소득분배율(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OECD국가)



아. 기술진보와 소득불균등

기술진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형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자동화의 진전 등으로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둘째, 기술진보는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 등을 통해 숙련노동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전문직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전문직 노동자의 소득이 비전문직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Acemoglu(1998)도 미국에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해 1980년대 숙련노동 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임금 프리미엄[72]이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Acemoglu(2002)는 숙련노동 공급의 증가가 숙련노동 편향적 기술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숙련노동 프리미엄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IT 등 숙련편향적 기술의 진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기술진보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신상품을 출현시킨다. 이로 인해 신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노동자의 소득이 상승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넷째,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및 수송

72) 대졸자임금과 비대졸자 임금 간 상대적 격차로 숙련노동 프리미엄을 측정한 것이다.

비용이 줄어들고 대규모 조직, 물품, 서비스 및 인력의 관리가 용이해지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많은 자본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이 위생산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자본력이 큰 자산가의 수익이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의 기술진보를 경험하였으며 미래 기술진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R&D 투자비율도 높다. 이는 우리나라가 향후 기술진보와 관련한 소득불균등 확대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자. 전세계적 경쟁문화의 확산

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케인즈 경제학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80년대 들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풍미하게 되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정부 개입 및 규제를 줄이는 대신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시한다. 또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공공복지 제도를 줄이며 국제적 분업을 위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실물과 금융부문의 시장개방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시장내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은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를 통해 전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소득불균등이 확대되었다. II장의 <표 II-10>을 통해 각국의 소득불균등 지표의 변동을 보면 80년대 이후 악화되는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소득불균등이 악화되었다는 점은 경쟁문화의 확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전개하면서 경쟁적 경제질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경제개혁의 내용은 대부분 당시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IMF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금융, 기업 지배구조, 노동, 공공 부문의 네 부문에 대한 개혁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들 개혁 내용의 핵심은 이 분야들에 글로벌 규준을 도입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노동시장에서는 정리해고제나 파견근로제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아졌으나 고용안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수합병이 용이해지고 활발해짐에 따라 고용조정이 확대되었으며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금융부문을 보면 금융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은행의 상업성 회복,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 강화, 자본자유화를 통한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확대, 금융감독업의 선진화와 금융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부문 전반의 개혁이 시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경제는 종래의 일본식 자본주의에서 영미식 자본주의로 더 가까이 이행하게 되었다.

3. 소득불균등 확대 원인 실증분석

가. 기존연구

소득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먼저 Sarel(1997)은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는 개선된다고 하였다. Bulir(2001)는 경제발전, 고용증대, 재정의 재분배기능 강화, 물가의 안정 등이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Beck, Demirguc-Kunt and Ross(2007)는 금융발전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분석하고 금융발전이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완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유발하므로 지니계수를 낮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Jaumotte, Lall and Papageorgiou(2008)는 기술변화가 세계화보다 불균등 확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무역자유화는 불균등을 낮추는 효과가, 금융자유화와 외국인직접투자는 불균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곽노선・김선아(2008)가 42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수준, 무역개방, FTA, 정부지출 등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GMM 모형의 적합성이 낮아 Pooled OLS를 이용하여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

앞서 선행 연구들은 모두 주로 OLS를 이용하여 추정결과를 도출하였으며 IV 또는 GMM을 통해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보완하였다. 실증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변수들 간 내생성문제를 해소하고 각 개별국가가 갖고 있는 관측되지 않는 개별속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주로 GMM 기법을 활용하여 추정결과를 도출하였으며 OLS는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73] 한편 본고는 System GMM 모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System GMM 모형은 Difference GMM 모형이 갖고 있는 Weak Instrumen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소득불균등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실증분석 문헌에서 고려하지 않은 요인들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존의 문헌과 달리 노동소득분배율과, 교육수준, 직업안정성 등과 관련한 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으며 경제개방의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국내시장 크기 효과를 통제하였다. 한편 본고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대리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진보와 관련한 변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나. 실증분석 방법 및 사용변수

본고는 1절에서 언급한 소득불균등 발생원인 중 대리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108개 국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국의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LIS(Louxembroug Income Studies),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 MIL(Milanovic(2009)) 등 다양한

73) 한편 System GMM 모형의 경우 수준변수간 함수식을 사용하므로 Fixed Effect 모형 및 Random Effect 모형과 마찬가지로 개별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Fixed Effect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부문으로부터 확보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정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GI_{i,t} = \alpha + \gamma_1 Y_{i,t} + \gamma_2 (Y_{i,t})^2 + \gamma_3 OP_{i,t} + \gamma_4 POP_{i,t} + \gamma_5 SIR_{i,t} + \gamma_6 EDU_{i,t} + \gamma_7 IF_{i,t} + \gamma_8 GOV_{i,t} + \gamma_9 LS_{i,t} + \gamma_{10} TEP_{i,t} + \epsilon_{i,t} \quad (1)$$

* $GI_{i,t}$는 t기 i국의 지니계수, $Y_{i,t}$는 1인당 PPP기준 소득, $OP_{i,t}$는 무역규모/GDP 비율, $POP_{i,t}$는 인구수, $SIR_{i,t}$는 자영업자 고용비중, $EDU_{i,t}$는 평균교육년수, $IF_{i,t}$는 물가상승률, $GOV_{i,t}$는 정부지출, $LS_{i,t}$는 노동소득분배율, $TEP_{i,t}$는 비상근직비중임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소득불균등 정도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여 일인당 PPP 기준 소득수준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소득수준 상승시 소득불균등이 역U자 형태로 변동할 경우 추정방정식 내 γ_2계수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경제개방도의 확대는 소득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γ_3계수는 양의 값으로 예상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구가 큰 국가일수록 국내시장 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경제주체가 더 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γ_4계수는 양의 값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구가 많은 국가가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수행할 경우 γ_4계수의 부호는 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영업자 비중과 비상근직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직업안정성이 낮고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γ_5와 γ_{10}계수는 양의 값으로 예상된다.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이 인적자본을 통해 창출되는 정도가 많고 기회의 균등정도가 높기 때문에 γ_6계수는 음의 값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근로자가 손실을 보는 반면 자산보유자가 이득을 누리면서 소득분배가 왜곡되므로 γ_7계수는 양의 값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지출이 많은 국가는 GDP 대비 정부지출이 많게 나타나므로 γ_8계수는 음의 값으로 예상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는 계선되면서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γ_9계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 실증분석 결과

(1) 전체 국가

실증분석 결과는 <표 III-2>에 정리하였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과 비상근직 비중 자료는 OECD 국가에서만 확보가 가능하여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해당 설명변수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Pooled OLS 모형은 System GMM 모형의 추정계수 값이 유사하게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추정계수의 부호도 이론과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인당소득)^2 설명변수를 제거한 추정결과에서 (일인당소득) 변수가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소득국가에서 소득불균등 정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OLS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반영하는 $\overline{R^2}$가 비교적 높은 값으로 도출되었다. GMM 모형에서 Sargan test 결과를 보면 추정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있는 경우 Sargan test가 귀무가설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본고와 같이 많은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표 III-2>의 Sargan test 결과가 반드시 모형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명변수별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인당 소득수준)과 (일인당 소득수준)^{2}의 추정계수가 유의하며 (일인당 소득수준)^{2}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소득불균등은 역 U자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 U자의 꼭지점은 7.58(OLS)과 7.65(GMM)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각국 일인당소득의 전세계 평균값인 8.47

보다 약간 작은 값이다. 따라서 대체로 일인당 소득이 전세계 평균치 보다 작은 국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불균등도가 확대되나 전세계 평균치 보다 큰 국가군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불균등도가 낮아지는 관계가 있다.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무역비중은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경제개방도의 확대가 소득 불균등 정도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무역비중의 변동은 주로 개도국의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모형 적합성이 높은 <표 III-4>, <표 III-5> 참조) 인구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소득불균등 정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소국에 비해 국내시장 규모가 큰 인구대국에서는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효율성이 높은 경제주체가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비중 추정계수는 예상과 부합하게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수가 많은 국가에서 직업안정성이 낮으며 소득불균등이 높은 경향이 있다. 평균교육연수는 대부분 예상과 부합하게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어 인적자본이 많이 확충되어 있을수록 소득불균등 정도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가상승률은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인플레가 높아지면 소득 불균등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낮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인플레는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모형 적합성이 높은 <표 III-4>, <표 III-5> 참조)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지출비중은 음의 부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개도국에서 정부지출이 사회복지보다는 공공부문 투자 등에 사용되거나 정부지출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 이와 같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정부지출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실증분석 결과 (전체 국가)

구분	Pooled OLS1		Pooled OLS2		System GMM1		System GMM2	
	Coeff.	S.E.	Coeff.	S.E.	Coeff.	S.E.	Coeff.	S.E.
(일인당소득)	39.970***	13.54	-6.428***	1.332	39.506***	3.422	-6.072***	0.440
(일인당소득)^2	-2.635***	0.754	-	-	-2.581***	0.193	-	-
무역비중	0.075***	0.012	0.074***	0.012	0.078***	0.004	0.074***	0.004
인구수	0.044**	0.020	0.038**	0.019	0.053***	0.005	0.047***	0.005
자영업비중	0.173*	0.103	0.178	0.126	0.195***	0.026	0.192***	0.025
교육년수	-0.497	0.352	-0.776**	0.381	-0.556***	0.132	-0.846***	0.126
물가상승률	0.010***	0.003	0.013***	0.003	0.002**	0.001	0.003***	0.001
정부지출비중	-0.086	0.118	-0.077	0.102	-0.037	0.038	-0.023	0.037
관측치수	183		183		183		183	
$\overline{R^2}$	0.662		0.623					
Sargan Test					31.84(0.000)		30.56(0.000)	

주: 1) 위첨자 *, **은 각각 5%, 1%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Sargan Test의 통계치는 χ^2값이며 ( )내는 유의수준임
3) 추정기간은 1960~2005년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2) 고소득(OECD) 국가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저소득 국가와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유사한 발전 계와 각종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OECD를 대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추정결과를 보면 (일인당소득)^{2}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OECD국가 내에서는 소득과 소득불균등이 U자 형태의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U자 형태의 최저점에서 일인당소득(로그) 값은 OECD 평균 일인당소득(로그) 값인 9.66보다 소폭 큰 10.20(OLS) 또는 10.11(GMM)으로 나타났다. 한편 System GMM2의 추정결과를 보면

(일인당소득)항이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어 대체로 소득증가와 더불어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OLS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반영하는 $\overline{R^2}$가 비교적 높은 값으로 도출되었다. GMM 모형의 Sargan test 결과를 보면 추정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명변수별로 보면 전체국가 샘플의 결과와는 달리 무역비중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지출비중은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실증분석 결과(OECD국가)

구분	Pooled OLS1		Pooled OLS2		System GMM1		System GMM2	
	Coeff.	S.E.	Coeff.	S.E.	Coeff.	S.E.	Coeff.	S.E.
(일인당소득)	-144.9***	50.358	-7.562***	2.406	-124.1***	15.41	-5.579***	0.781
(일인당소득)^2	7.102***	2.555	-	-	6.138***	0.795	-	-
무역비중	0.001	0.018	0.018	0.017	0.007	0.007	0.023***	0.007
인구수	0.042***	0.009	0.050***	0.010	0.046***	0.005	0.054***	0.005
자영업비중	0.317***	0.071	0.264***	0.077	0.344***	0.036	0.320***	0.037
교육년수	-0.382	0.305	-0.229	0.325	-0.377***	0.108	-0.227**	0.109
물가상승률	-0.070**	0.034	-0.027	0.038	-0.038***	0.009	-0.018**	0.008
정부지출비중	-0.336***	0.111	-0.459***	0.117	-0.260***	0.055	-0.344***	0.055
관측치수	90		90		90		90	
$\overline{R^2}$	0.901		0.902					
Sargan Test					12.77(0.046)		23.32(0.001)	

주: 1) 위첨자 *, **은 각각 5%, 1%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Sargan Test의 통계치는 χ^2값이며 ( )내는 유의수준임
3) 추정기간은 1960~2005년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표 III-4>는 노동소득분배율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실증분석한 것으로 앞서의 실증분석결과와는 달리 GMM 모형의 Sargan test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추정모형이 적합함을 지지하고 있다. System GMM1에서 (일인당소득)^{2}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System GMM2 모형에서

일인당소득 수준변수는 음의 값을 갖고 있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득불균등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영업비중의 상승은 소득불균등을 확대시키며 교육연수, 정부지출비중,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상승은 소득불균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무역비중과 물가상승률의 경우 대부분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74][75]

<표 III-4> 실증분석 결과(OECD국가)

구분	Pooled OLS1		Pooled OLS2		System GMM1		System GMM2	
	Coeff.	S.E.	Coeff.	S.E.	Coeff.	S.E.	Coeff.	S.E.
(일인당소득)	-33.62	86.11	-4.006**	2.024	-78.34*	47.36	-3.680**	1.524
(일인당소득)^2	1.503	4.392	-	-	3.790	2.402	-	-
무역비중	-0.004	0.015	-0.003	0.017	-0.006	0.012	-0.002	0.012
인구수	0.053***	0.015	0.055***	0.014	0.047***	0.010	0.051***	0.009
자영업비중	0.283***	0.097	0.265***	0.069	0.292***	0.074	0.242***	0.066
교육연수	-0.885**	0.360	-0.881*	0.358	-0.883***	0.212	-0.878***	0.207
물가상승률	-0.024	0.065	0.001	0.042	-0.013	0.053	0.055*	0.030
정부지출비중	-0.267*	0.146	-0.279**	0.135	-0.309***	0.115	-0.353***	0.110
노동소득분배율	-0.131***	0.050	-0.141***	0.035	-0.032***	0.012	-0.039***	0.011
관측치수	51		51		51		51	
$\overline{R^2}$	0.738		0.744					
Sargan Test					3.42(0.33)		4.11(0.25)	

주: 1) 위첨자 *, **은 각각 5%, 1%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Sargan Test의 통계치는 χ^2값이며 ( )내는 유의수준임
3) 추정기간은 1960~2005년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표 III-5>는 비상근(part time)직 비율을 설명변수에 추가한 것이다. System GMM 모형의 Sagan test 결과는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74) OECD국가의 경우 이미 경제개방도가 높음에 따라 무역비중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75)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뚜렷이 초래할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는 물가상승이 명목 임금이나 금리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른 편이므로 물가상승이 소득불균등을 확대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인당소득)^2 항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일인당소득)^2 항을 제외한 System GMM2의 추정결과를 보면 비상근직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이 악화되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표 III-5> 실증분석 결과(OECD국가)

구분	Pooled OLS1		Pooled OLS2		System GMM1		System GMM2	
	Coeff.	S.E.	Coeff.	S.E.	Coeff.	S.E.	Coeff.	S.E.
(일인당소득)	-39.36	94.925	-4.94**	2.105	-83.69	56.29	-4.74**	1.839
(일인당소득)^2	1.747	4.843	-	-	4.001	2.857	-	-
무역비중	-0.001	0.016	0.000	0.018	-0.001	0.015	0.002	0.014
인구수	0.056***	0.016	0.058***	0.015	0.049***	0.012	0.053***	0.011
자영업비중	0.326***	0.101	0.304***	0.061	0.334***	0.088	0.282***	0.078
교육년수	-0.882**	0.388	-0.882**	0.385	-0.817***	0.261	-0.811***	0.254
물가상승률	-0.022	0.065	0.006	0.041	-0.017	0.064	0.056	0.036
정부지출비중	-0.221	0.145	-0.236*	0.131	-0.271**	0.136	-0.316**	0.128
노동소득분배율	-10.22*	5.819	-11.38***	3.736	-0.019	0.015	-0.027**	0.013
비상근직비율	0.132	0.105	0.134	0.103	0.117*	0.062	0.125**	0.060
관측치수	49		49		49		49	
$\overline{R^2}$	0.747		0.753					
Sargan Test					3.67(0.29)		4.11(0.25)	

주: 1) 위첨자 *, **은 각각 5%, 1%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Sargan Test의 통계치는 χ^2값이며 ( )내는 유의수준임
3) 추정기간은 1960~2005년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Ⅳ.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소득불균등의 심화는 여타 사회지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국민후생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소득불균등의 심화는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소득불균형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면 물적 자본형성이 촉진됨에 따라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 효율적인 경제주체가 더 많은 보상을 얻음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때 소득불균형은 경제효율성의 확대와 동시에 발생하므로 경제성과와 정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셋째,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면 부유층에 진입하려는 개인의 욕구가 증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개인의 근로의욕이 증대되는 동시에 자신 또는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인센티브가 강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으로 인해 소득불균형이 크게 확대된 경우 이러한 긍정적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면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소득불균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완전 금융시장 경로에 따르면 교육과 직업선택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불완전 금융시장으로 인해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제주체는 교육과 직업선택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능 및 노동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저해된다(Galor(2011)).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업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며 경제성장이 저해된다(Banerjee and Newman(1993)).

두 번째 경로인 정치경제학적 경로는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소득불균형이 증대되면 소득분배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소득 재분배 정책이 도입되면서 자원분배 체계가 왜곡된다. 이는 투자와 인적자본형성 저해하면서 성장을 정체시킨다. 한편 소득불균등이 높은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로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효율적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인적자본형성을 저해하면서 경제성장을 정체시킨다(Saint-Paul and Verdier(1996), Benabou(2000, 2002)).

세 번째로 인적자본형성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인적자본투자가 확대될수록 인적자본투자의 한계수익률은 감소한다. 따라서 소득불균등이 완화되어 인적자본투자가 개인들에게 분산될수록 전체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반면 일부집 에 교육 및 인적자본투자 지출이 집중되면 경제전체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의 확대는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저하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물적자본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인적자본과 물적자본간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불균등 완화를 통해 인적자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경제성장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

네 번째 경로는 직업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소득불안정성 및 소득격차의 확대는 개인들로 하여금 지대추구형 안전직업[76] 선호심리를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우수인력이 경제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게 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에서 우수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섯 번째는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을 통한 경로이다.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면 상위계층에서의 교육기회의 독점으로 인해 경쟁에 노출된 정도가 낮아지므로 인적자본 확충 노력을 적게 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실제로

76)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

OECD 보고서(2008)도 소득불균형과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의 용이성에 관한 경로이다.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면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등이 줄어듦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경제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상호간 신뢰도가 높으며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제반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구성의 오류, 모럴해저드, 쏠림현상 등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의 축소는 사회적 비용 절감, 상호 협력과 신뢰 증진 등을 통해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소득불균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소득불균형의 원천이 근로소득인지 자산소득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소득불균등에 자산소득의 기여도가 클수록 부정적 효과가 근로소득의 기여도가 클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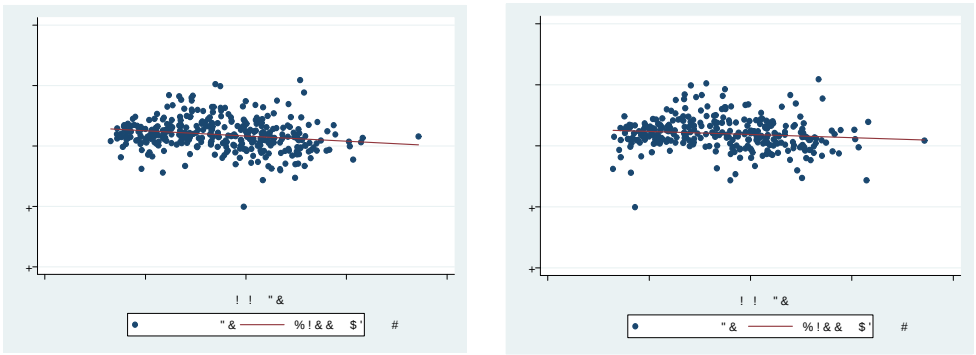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경제성장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두변수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림 IV-1>을 통해 각국의 t기 소득불균등 정도와 t 및 t+1기의 경제성장률 간 산포도를 보면 소득불균형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77]

77) 두 변수 간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며 모든 추정치가 5%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성장률$_{i,t}$ = 3.37 - 0.043*지니계수$_{i,t}$ (9.20) (-4.08) 추정기간은 1960~2005까지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관측치수: 356개, $\overline{R^2}$=0.03	경제성장률$_{i,t+1}$ = 2.87 - 0.026*지니계수$_{i,t}$ (6.33) (-2.09) 추정기간은 1960~2005까지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관측치수: 310, $\overline{R^2}$=0.01

<그림 IV-1> 소득불균등 정도(X축)와 경제성장률(Y축)의 산포도

($GINI_t$ → $\triangle GDP_t$) ($GINI_t$ → $\triangle GDP_{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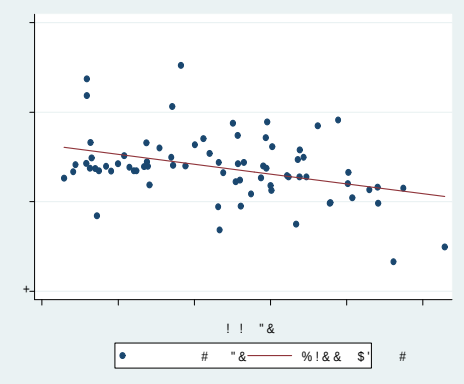
한편 현재 기의 소득불균등이 향후 일정기간동안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t년의 소득불균등 정도와 t년~t+n년 중 경제성장률간 관계를 도출해 보았다. <그림 IV-2>를 통해 소득불균등 정도와 장기 경제성장률간 관계를 보면 대체로 소득불균등이 심화된 나라일수록 장기경제성장률도 낮은 것으로 도출되고 있다.[78] Alesina and Rodrik(1994), Persson and Tabellini(1994), Perotti(1996), Galor(2011) 등은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종칠(2010)이 System GMM, 3SLS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IV-1>과 <그림 IV-2>의 산포도는 이러한 기존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78) 두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내는 t값이다. 모든 추정계수가 1%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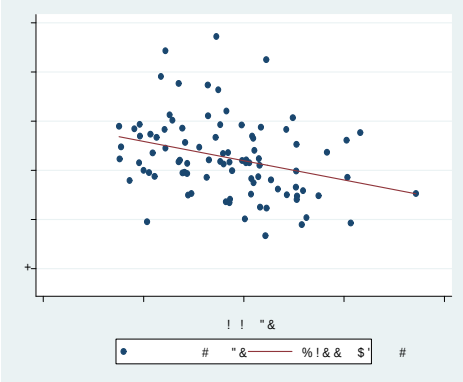
95이후 경제성장률$_{i,t}$ = 3.72 - 0.043*지니계수$_{i,t}$(95년) (7.42) (-3.20) 추정기간은 1960~2005까지이며 5년 주기자료를 사용. 관측치수: 92, $\overline{R^2}$=0.07	90이후 경제성장률$_{i,t}$ = 3.74 - 0.054*지니계수$_{i,t}$(90년) (6.63) (-3.47) 추정기간은 1960~2005까지이며 5년 주기자료를 사용. 관측치수: 74, $\overline{R^2}$=0.13

<그림 IV-2> 소득불균등 정도(X축)와 장기 경제성장률(Y축)의 산포도

1990년 지니계수와
1990～2005년 경제성장률



1995년 지니계수와
1995～2005년 경제성장률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크게 높였다. 경제규모 뿐 아니라 일인당 소득의 세계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며 절대적 빈곤이 줄고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살률, 범죄율 등 사회지표 또한 빠르게 악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본고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개방과 경쟁의 심화,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시직,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며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되어 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구간 별로 보았을 때 상위층과 하위층의 비중이 늘고 중간소득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고 있다(<표 Ⅱ-8> 참조).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는 근로소득자 사이에 있어서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표 Ⅱ-32>, <표 Ⅱ-33> 참조).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와 각종 사회지표의 악화는 이미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심화되어온 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은 적시에 이루어져 오지 못했다. 최근 들어 복지 논쟁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소외된 계층,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세적으로 악화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가 과거 다른 어떤 나라에서의 경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당사자, 사회, 국가의 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우리사회의 여러 면에서 어두움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경쟁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불균등 정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쟁심화에 따라 그 만큼 사회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경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수출, 경상수지 등의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고, 소득격차의 확대, 빈곤층에 대한 배려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 OECD 국가들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재정지출은 2007년 중 국민총생산의 약 20%에 달하는 데에 비해 이에 대한 우리의 재정지출은 아직 7.5%로 OECD 내에서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OECD 2011). 물론 지난 약 10년간 복지지출의 성장세가 매우 빠르고, 또한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더불어 연금,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지출이 현재의 프로그램 하에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여러 사회지표들의 움직임으로 볼 때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아직 미흡한 수준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지표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오고 있는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국가로 자주 인용되었다.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제 II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약 20년간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 그룹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7년 소득계층 하위 10% 소득에 대한 소득계층 상위 10% 소득의 비율(가처분소득 경계값 기준)은 4.7로 이미 OECD 평균인 4.2보다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79]은 2006년 기준 14.4%로 OECD국가 중 9번째로 높았다.[80] 더구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이것이 소득 통계에 제대로

79) 중위소득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2) OECD(2011), "The OECD's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반영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지니계수나 소득분위 등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더욱 크게 악화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악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소득격차의 확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의 확대는 근로계층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부의 분배의 불균형 심화와 자산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의 악화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1]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부동산 소유의 편중은[82] 부의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이에 따른 자산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상위 10%가 전체 순금융자산의 66.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3] 본고의 제 III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산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사회의 소득불균등 정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자산소득 간 불균등 정도가 근로소득 간 불균등 정도에 비해 높은 데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소득불균등 심화와 사회지표의 추세적 악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자산소득에 의한 소득불균등 확대 방지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그 사회에서의 자본축적은 높아지고 개인과 가계의 부의 수준도 높아진다. 그리고 이에 의한 자산소득의 규모도 커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산소유의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81)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보유 형태별 비중을 보면 금융자산 21.4%, 부동산 75.8%, 기타실물자산 2.9%로 나타났다. 통계청・금감원・한국은행,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0.

82) 우리나라 토지는 개인토지소유자 1,367만명 중 상위 50만명이 소유한 토지비율이 2006년 현재 전체 토지소유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보도자료 2007.

83) 이정희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년~2007년) 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것이다.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부의 불균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이것이 생산비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고착시키기도 한다. 2007년 중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총액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거주주택을 제외하면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자산도 1분위에서 3분위 가구는 전체적으로는 순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4분위 가구가 73만원을 보유하는데 비해 상위 5%가 전체 순금융자산의 50.1%, 상위 10%는 66.5%를 차지하고 있었다.[84]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지금보다 하향 안정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대 간 계층의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속세의 과세를 보다 엄격히 하고 탈법적, 변칙적 상속과 탈세를 가능케 하는 각종 loophole을 줄이며 우리사회에서의 기부 문화의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우리나라는 과거 비교적 저렴한 공교육 비용과 균등한 교육기회의 부여로 계층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의 부담 비율이 높은 점, 그리고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의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은 교육기회의 균등성과 향후 계층간 이동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제 III장의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적자본의 확대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가 개인들의 인적자본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균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84) 이정희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년~2007년) 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다 균등히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고 또한 계층간 소득수준의 이동이 보다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나아가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결국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잠재성장률의 유지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의 발전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모의 소득수준에 지나치게 제약받지 않고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저리의 학자금 대출제도의 확대, 기업과 정부에서 각종 장학금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나아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경험에 의하면 우수한 유아교육은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을 높임으로써 아동들,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향후 커다란 경제,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지긴 하지만 제 II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전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정책(조세, 이전지출)은 우리의 경우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재정정책 이전의 지니계수와 재정정책을 통해 개선된 지니계수 사이의 차이를 보면(<표 II-40>),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017로 프랑스 0.20의 8.5%, 일본

0.12의 14.2%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세와 이전지출 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보다 효과적이 되도록 재정정책의 적극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크게 낮기 때문이며 또한 선진국들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tax credit 등 소득지원제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서구 선진국에서의 세제개편의 추세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는 기업과 인력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상황에서 직접세를 올릴 경우 기업과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오히려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개인소득세의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85]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 II장 <표 II-41>) 개인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원의 포착 정도가 낮은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등으로 지난 10여년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전지출제도의 확대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OECD 보고서(2011)에 의하면 2006년 중 평균적으로 한국 가정은 정부로부터 복지수당으로 소득의 4%만을 받고 있으며 소득의 8%이하를 세금과 사회분담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연 최저 수준이다. 일반적인 OECD 국가에서는 복지수당이 소득의 약 22%에 달하며 납부세금은 약 29%에 달하고 있다(OECD 2011). 따라서 현재 약 3%만의 인구에 대해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질적 빈곤계층에 대해 보다 유효한 지원수 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85) 2010년 Personal taxation의 Effective tax rate을 보면 우리나라는 17.9%로 일본(25.7%), 중국(25.4%), 미국(24.3%), 영국(31.5%), 독일(34.8%), 프랑스(34.7%), 이태리(42.6%) 등에 비해 낮다. (Financial times, 2011.9.6)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도 빈곤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수 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기 위해 중요한 과제다. 비정규직은 아무래도 기업의 훈련이나 인적자본 축적에 있어 소홀하기 쉽고 결국 소득분배 뿐 아니라 경제전체의 인적자본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약 3~4년 간 전체고용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2007년 도입 이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해고가 많아 이들의 전체고용에서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통한 고용 인센티브를 줄이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의 강력한 노조활동, 그리고 글로벌화에 따른 대기업간의 국제경쟁 심화는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 가 압력으로 작용하게 하여 이것이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고요건의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완화는 궁극적으로 정규직 고용의 비용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리라 생각된다.

5.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에 비해 약 3~4 배에 달하는 실정이다(2000년대 중반 기준). 이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있어 최근 몇 십년간 노년층 빈곤이 상당히 감소해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모부양, 이혼, 출산, 가족의 규모 및 형태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급속히 바뀌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미숙과 개인의 노후대책이 되어있지 않은 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제 II장에서 본바와 같이 이의 주요인이 질병과 경제적 이유이다.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해 보인다. 지난 약 5~6년 동안 노인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 수혜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이 제도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노년층 중 근로 수입이 없는 경우 빈곤율이 70%에 달하는 점은 무엇보다 우리의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고, 연금의 수혜계층이 적음을 말해주고 있다.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완화되겠지만 지금도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은 크게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연금 가입 비중을 늘리고[86], 또한 기업연금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도록 제도적, 세제상 유인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일터에서 정년을 점점 연장해 나가는 것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연금의 고갈을 막고 장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86)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10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률은 46.9%, 고용보험 52.1%, 산재보험 93.1%, 건강보험 49.5% 등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0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2011) 한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1%로 추정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실시한 베이비붐 세대 대상 패널조사 결과”)

6.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환율,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의 왜곡과 경제불안정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큰 폭으로 절하될 경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영업잉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림 II-5> 참조). 또한 이는 수출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이익의 격차를 가져와 근로소득자 간 소득의 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포함한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은 소득불균등 심화의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저축과 투자,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소득분배의 악화를 완화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향후 정책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개방과 국제화,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 환경에서 우리경제의 성장과 활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이다. 그러나 이에 부수하는 소득격차의 심화와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은 언제나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등은 평균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87] 우리 국민생활의 실상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각종 사회지표들의 변화에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적절히 대응을 해주어야 국민생활 전반의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안정과 통합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나아가서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87)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민소득 통계와 더불어 공동으로 정책 평가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정부의 재정지출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복지제도와 재원의 확충은 필요한 것이지만 과거 유럽선진국들의 경험을 볼 때 이것이 결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데 실패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선회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소득격차의 확대와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경제의 효율성을 장려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균형을 조심스럽게 선택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부유층,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늘리고 민간부문 내에서 나눔의 문화와 관행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우리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수현 (2009), 『한국의 빈곤』.

김태완 (2009), “경제위기 이후 정책적 노력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0-32.

곽승영・이영선 (2010), “한국경제의 이행과정과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요건”.

곽노선・김선아 (2008), “소득분배 결정요인 연구: FTA 효과 및 Kuznets 곡선 검정,” 국제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곽승영 (2010), “An analysi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1965-2008 and Policy Suggestions: the Role of Winner-Take-All Socio-Economic Milieu, Globalization, Technological Changes, and Education(경제학 공동학술회의 발표자료).

남상섭 (2009), “한국 가계자산의 분배와 불평등 요인분해,” 경제연구 제27권 제2호.

노대명 (2008), “서구 근로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08-18-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반정호 (2010), “고용구조 변화와 임금불평등: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월간노동리뷰

박명호 (2010), “스티글리츠 위원회와 경제사회 발전지표”.

박충렬 (2010), “경제적 성과와 사회진보의 합리적인 측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국회입법조사처보 통권7호, 2010년 겨울, pp. 60-69.

성명재 (2010),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주요 특징 및 요인별 분해,” 한국조세연구원 현안분석.

_____ (2001),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working paper.

손종칠 (2010), “소득불균형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 425호.

신동균 (2007)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經濟學硏究 제755집 제4호.
유경준 (2009),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_____ (2007), “소득불평등 개념 인식의 국제비교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_____ (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여유진, 김태완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1호.
은기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제 28권 제2호.
박종순 · 이준영 · 김순덕 (2003),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제 36권 제1호.
이정우 (2010), 『불평등의 경제학』.
전병유 외(2006),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조윤제 (2001), “國際經濟環境과 韓國의 經濟發展”,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금융경제연구 제116호.
_____ (2001), “대외사건과 한국의 경제발전: 1950~70년대 외무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7(1), 한국은행.
_____ (2006), 『한국경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금융연구원.
_____ (2009),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 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찾아서』, 한울.
_____ (2011), “한국의 경제정책과 공정사회”(경제학 공동학술회의 발표자료).
정후식 (2011), “일본의 노후난민 시대 도래와 정책대응”, 한은조사연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매년).
_____ (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Acemoglu, Daron (1998), “Why Do New Technologies Complement Skills? Directed Technical Change and Wage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cemoglu, D. (1998), “Why do new technologies complement skills Directed technical changes and wage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cemoglu, D. (2002), “Directed Technical Change”, *Review of Economic Studies.*

Alesina, A. and Rodrik, D. (1994),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2): 465-490.

Beck, T., A. Demirguc-Kunt and L. Ross (2007), "Finance, Inequality and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Berg, Andrew G. and Jonathan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Bulir, Ales (2001), "Income Inequality: Does Inflation Matter?," IMF Staff Papers, Vol. 48, No. 1.

Galor, Oded (2011), “Inequality, Human Capital Formation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North-Holland.

Jaumotte, Florence, Subir Lall, and Chris Papageorgiou (2008), “Rising Income Inequality: Technology, or Trade and Financial Globalization?” IMF Working Paper, WP/08/185.

Lemieux, T., W. MacLeod, and D., Parent (2007), "Performance Pay and Wage Inequality," IZA Discussion Paper No. 2850.

Michael Sarel (1997), "How Macroeconomic Factors Affect Income Distribution: The Cross-Country Evidence," IMF Working Paper, WP/97/152.

OECD (2008), “Gl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_____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_____ (2010),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_____ (2011), 『Pension at a glance』.

_____ (2011), "The OECD's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Perotti, R. (1996).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democracy: what the Data say",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149-187.

http://www.who.int/whosis/whostat/en/

http://titania.sourceoecd.org/

http://www.oecd-ilibrary.org.dl.bok.or.kr:8000/statistics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http://ecos.boknet.intra/Index.jsp

http://www.nts.go.kr/

http://www.stat.go.jp/

http://www.worldbank.org/

http://pwt.econ.upenn.edu/php_site/pwt_index.php

http://www.barrolee.com/

http://www.bea.gov/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http://eng.stat.gov.tw/

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61006.html

http://www.stat.go.jp/data/kakei/index.htm

<부록> 역대 정부별 주요 복지법안

1. 박정희정부(1961～1979)

기초적인 사회복지법을 재정비하고,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법을 제정

- 생활보호법(1961), 군인연금법(1963),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의료보험법(1963), 공무원연금법(1960) 등
- 1976년 의료보호법 제정, 1977년 1월부터 의료보호(의료부조) 시작

2. 전두환정부(1980～1987)

민주화운동 등으로 '3대 복지입법'실시

- 1988년 1월 최저임금제 시행
- 1988년 1월 국민연금 시행
- 1987년 12월 의료보험법 개정을 개정하여 노태우정부 시기인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3. 노태우정부(1988～1992)

국민들의 요구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함양하는 데 주력

- 1989년 '국민의료보험법'에 거부권 행사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추진(300인이상 사업장)
- 1991년 사내복지기금법 시행으로 기업의 복지제공 책무 법제화

4. 김영삼정부(1993～1997)

OECD 가입을 계기로 세계화시대에 과거와 다른 복지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에 기여

- 1995년 고용보험 시행(노태우정부에서 발의)
- 1995년 농어촌연금 시행
- 1997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직장조합 제외, 공무원·교원 의료보험조합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5. 김대중정부(1998～2002)

외환위기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사회보장 제도를 크게 개선 · 확대

- 1999년 3월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연금 확대
- 1999년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 기획 '을 출범시켜 4대 사회보험의 통합관리 모색
- 1998년 10월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 2000년 7월 산재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공적부조제도의 획기적 개선
- 2000년 직장의료조합까지 포함하여 의료보험을 통합
- 2002년 의료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 제한 해제
-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구분 없이 국민연금을 전 국민에게 적용

6. 노무현정부(2003～2007)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

- 2004년 만 5세아 무상보육확대, 2005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제도 실시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2007년 국민연금 개혁 행(소득대체율 계적 인하)
-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빈곤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인상, 긴급지원제도 도입
- 2008년 1월 근로장려세제 시행
- 장애인 복지 강화(장애수당 수급자 증가)

금융경제연구 발간목록

301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 분석(2007.5)	박성욱
302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 요인 - 기업경영 관련 여건을 중심으로(2007.6)	전봉걸 · 권철우
303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 분석(2007.6)	김현정
304	출산율저하가 인적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2007.7)	김기호 · 유경원
305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2007.8)	정형권
306	최근 통화량의 변동요인 분석 - 주택가격을 고려한 통화수요함수 추정(2007.8)	유병학
307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2007.8)	김우영
308	비용상승 충격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2007.9)	정규일
309	2007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 -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in a Financially Globalized World(2007.9)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310	금융기관 해외투자 확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9)	강종구
311	외환위기 전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요인 비교분석(2007.10)	김윤영
312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2007.10)	유경원
313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 The Chiang Mai Initiative(2007.10)	Hyoung-kyu Chey
314	Forecasting Output Growth and Inflation - How to Use Information in the Yield Curve(2007.10)	Huiyu Huang · Tae-Hwy Lee · Canlin Li
315	How Much Inflation is Necessary to Grease the Wheels?(2007.12)	Jinil Kim · Francisco J. Ruge-Murcia
316	선진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 분석(2008.1)	김희식
317	물적·인적자본의 한계생산성 분석(2008.1)	박성욱
318	중국의 금융개혁과 은행산업 생산성변화(2008.1)	오대원

319 개방경제하에서의 최적 통화정책(2008.1) 정용승

320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2008.1) 홍재범

321 Explaining the Cyclical Behavior of the Korean Labor Market(2008.2) Weh-Sol Moon

322 Inventory, Factor-Hoarding and the Dynamic Response to Monetary Shocks(2008.2) Kwang Hwan Kim

323 원/달러 무위험 금리차의 특성에 관한 연구(2008.2) 송치영

324 Total Factor Productivity by 72 Industries in Korea and International Comparison(2008.2) Hak K. Pyo · Hyunbae Chun · Keun Hee Rhee

325 Market Services Productivity in Korea: An International Comparison(2008.2) Hyun Jeong Kim

326 A Political Economic Critique on 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nd the Implications for East Asia(2008.3) Hyoung-kyu Chey

327 The Growth and Determinants of Vertical Trade in Korea(2008.3) Young Kyung Suh

328 제조업 업종별 특성과 수출경쟁력(2008.3) 권철우 · 전봉걸

329 Competition in the Credit Rating Industry(2008.3) 이인호

330 Non-Interest Income of Commercial Bank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2008.3) Joon-Ho Hahm

331 An Assessment of the New Keynesian Phillips Curve in the Korean Economy(2008.3) Bae-Geun Kim · Byung Kwun Ahn

332 미 달러화 환율의 장단기 결정요인 분석(2008.4) 김윤영

333 중국 제조업의 효율성 변화와 시사점(2008.4) 오대원

334 사교육투자의 효율성 분석(2008.4) 이찬영

335 외환거래 확대의 시장안정효과 분석(2008.5) 김희식

336 Do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Really Matter(2008.5) Junhan Kim

337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자산가격 변동과 경제안정(2008.5) 김양우 · 우준명

338 기혼여성의 맞벌이 결정요인 분석(2008.6) 김우영

339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기술진보 확산효과 분석(2008.8) 박성욱

340 The Cost Channel Effect of Monetary Policy in Korea(2008.8) Myung-Soo Yie

341 해외 공급충격과 개방경제의 최적 금리준칙(2008.8) 김근영

342 고용보호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8.8) 문외솔

343 장·단기 금리격차의 생산갭 예측력 분석(2008.9) 이명수

344 고용구조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2008.9) 김우영

345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 분석(2008.9) 이찬영

346 Estimation of Hybrid Phillips Curve in Korea(2008.9) Woong Kim

347 Can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Be a Model for East Asian MonetaryCooperation?(2008.10) Hyoung-kyu Chey

348 주택 가격지수 산정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이용한 실증연구(2008.10) KAIST 금융공학연구센터

349 2008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
- Recognizing and Coping with Macroeconomic Model Uncertainty in Designing Monetary Policy(2008.10)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350 소비자물가에 대한 유가 및 환율충격의 비대칭성·비선형성 분석(2008.11) 김기호·윤성훈

351 불완전 환율전가하에서 환율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2008.11) 윤성훈·김귀정

352 Inflation Volatility and Stock Returns: Some International Evidence(2008.11) Ky-hyang Yuhn·Sang Bong Kim

353 외환시장압력과 국외부문 통화공급 변동의 관계 분석(2008.11) 김용복

354 통화적 물가결정이론으로 본 장기균형물가와 인플레이션(2008.11) 김배근

355 물가·성장간 관계변화 분석(2008.11) 송승주

356 The Impact of Foreign Bank Penetration on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in Emerging Economies: Evidence from Bank-level Data(2009.1)
Ji Wu · Alina C. Luca · Bang Nam Jeon

357 국가별 금리차의 요인분해(2009.1) 유복근

358 글로벌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한 해외충격의 파급효과 분석(2009.1)
김윤영 · 박준용

359 통화옵션을 이용한 미래 원/달러 환율의 위험중립 확률분포 추정(2009.1)
이승환

360 통화정책과 주식수익률의 관계에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 한국의 경우(2009.2)
이상규 · 김양우 · 우준명

361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과 대출경로(2009.2) 김준한 · 이명수

362 지적재산 보호와 경제성장(2009.2) 박성욱

363 Opening to Capital Flows and Implications from Korea(2009.2)
Kyungsoo Kim, Byoung-Ki Kim and Young Kyung Suh

364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2009.2) 박강우 · 홍승제

365 Market Structure, Bargaining, and Covered Interest Rate Parity(2009.2)
Byoung-Ki Kim

366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2009.2) 김현정 · 김우영 · 김기호

367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결정행태 분석(2009.2) 김웅 · 홍승제

368 The Impact of Affinity o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Case of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2009.3) Hyoung-kyu Chey

369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생산성: Baumol 효과를 중심으로(2009.3) 오완근

37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술진보 격차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2009.3) 김배근

371 The Estimation of Capital Stocks,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Potential GDP(2009.3) Hak K. Pyo · Sunyoung Jung

372 Does the Liquidity Effect Guarantee a Positive Term Premium?(2009.3)
Kyuil Chung

373	개별가격변동과 통화정책(2009.3)	박강우
374	우리나라에서의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 평가(2009.3)	김웅
375	Labor Market Frictions and Wage Contracts(2009.3)	문외솔
376	채무 만기연장에 관한 게임이론적 분석(2009.3)	정형권
377	개인저축률과 거시경제변수간 관계분석(2009.3)	송승주
378	환율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2009.4)	김용복・곽법준
379	가계재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 행태(2009.4)	이찬영
38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2009.4)	김우영・김현정
381	Are Structural Parameters of DSGE Models Stable in Korea?(2009.4)	Jiho Lee
382	Double Drain, Risk of Recession and Monetary Policy in Small Open Economies(2009.5)	Geun-Young Kim
383	A Way Forward for Asian Bond Market Development(2009.5)	Hong Bum Jang・Suk Hyun
384	개방경제의 실질소득지표에 대한 연구(2009.6)	김배근
385	실물・금융변수와 주택가격간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2009.6)	손종칠
386	은행의 비이자영업 확대와 시스템 위험(2009.6)	김기호・윤성훈
387	2009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 - The Credit Crisis: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Policy Implications(2009.6)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388	낙인효과(stigma effect)와 자본이동성이 국채 CDS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2009.7)	김용복
389	Comparative Advantage and Labor Market Dynamics(2009.7)	Weh-Sol Moon
390	투자자의 시장심리를 반영한 자산가격 변동요인 분석(2009.8)	김윤영・이진수
391	주가와 재무구조 정보를 이용한 기업부문 신용리스크 측정(2009.8)	이승환
392	직접투자 유출입이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영향(2009.8)	황광명

393 은행부문의 통화불일치 평가와 발생요인 분석(2009.8) 서영경 · 김근영

394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A Model of Cournot Competition and Bargaining with Outside Option(2009.9) Byoung-Ki Kim

395 The Determinants of Informal Sector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y : the Case of Korea(2009.9) Donghun Joo

396 산업간 지식전파효과 분석 :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2009.9) 김현정

397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2009.9) 김웅

398 다부문 경제성장모형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평가(2009.9) 김배근

399 최적필터(optimal filter)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확률변동성 및 점프 추출(2009.9) 윤재호

400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연구(2009.10) 임진

401 중고령자의 은퇴결정요인 분석(2009.10) 손종칠

402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제정책(2009.10) 서상원

403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Evidence from Stock Prices(2009.10) Xiaodan Zhao · Yoonbai Kim

404 'Sleeping with the Enemy' or 'An Ounce of Prevention': Sovereign Wealth Fund Investments and Market Destabilization(2009.10) April Knill · Bong-Soo Lee · Nathan Mauck

405 Fluctuations in Exchange Rates and the Carry Trade(2009.10) Kyuil Chung · Òscar Jordà

406 실물경기변동모형에 의한 경기침체 요인분석(2009.11) 송승주

407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2009.11) 양동휴

408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 변화 분석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중심으로(2009.11) 유복근 · 최경욱

409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East Asia: How Has Korea Managed the Crisis and What Has It Learned?(2009.11) Yung-Chul Park

410 가구패널자료 접속을 통한 가계의 유동성제약 변화 연구(2009.11) 김기호

411 자본유출입의 경기순응성과 파급경로(2009.12) 송치영 · 김근영

412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2009.12) 장지상 · 이근기

413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2009.12) 황상필

414 Macro Prudential Supervision in the Open Economy, and the Role of Central Banks in Emerging Markets(2010.2) Joshua Aizenman

415 Risk-Factor Portfolios and Financial Stability(2010.2) Gus Garita

416 신용마찰의 경제환경 하에서의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2010.2) 정용승

417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2010.2) 윤재호 · 김현정

418 Measuring Systemic Funding Liquidity Risk in the Interbank Foreign Currency Lending Market(2010.2) Seung Hwan Lee

419 선물환시장의 효율성과 무위험금리차(2010.2) 황광명

420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2010.2) 임진 · 서영경

421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2010.3) 김승원

422 횡단면분포 특성을 이용한 기업의 경기반응 분석(2010.3) 김웅

423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2010.3) 강성진

424 불확실성이 설비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2010.3) 홍성표

425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2010.3) 손종칠

426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거래차익 - 한국의 사례(2010.4) 유복근

427 Local Sharing of Private Information and Central Bank Communication(2010.4) Byoung-Ki Kim

428 조건부 도산확률을 이용한 은행부문의 시스템리스크 측정(2010.4) 이승환

429 Optimal Discretionary Policy vs Taylor Rule: Comparison under Zero Lower Bound and Financial Accelerator(2010.4) Donghun Joo

430 개방경제의 금리기간구조 분석(2010.5) 박하일

431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기술적 효율성을 감안한 접근방법(2010.8) 정선영

432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2010.8)	이상호
433	창립 60주년 기념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 - The Changing Role of Central Banks(2010.8)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434	은행 예대금리 행태 분석(2010.8)	윤재호
435	Managing Openness: Lessons from the Crisis for Emerging Markets(2010.10)	Barry Eichengreen
436	환율동학에 대한 기대와 통화정책의 유효성(2010.10)	김근영
437	Wage Inequality and the Efficiency of Workers in Korea, 1965 - 2007(2010.10)	곽승영
438	은행의 레버리지 행태와 유동성 창출(2010.10)	이승환
439	Theories of International Currencies and the Future of the World Monetary Order(2010.11)	Hyoung-kyu Chey
440	Regional Economic Disparity, Financial Disparity,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China(2010.11)	J. Peng, Bong-Soo Lee, G. Li and J. He
441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관한 최근 논의(2010.11)	김병기, 송승주
442	An Empirical Evaluation of Two Financial Accelerator Mechanisms: the Balance Sheets Effects of the Bank versus Those of the Firm(2010.11)	Donghun Joo
443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분석(2010.11)	강종구
444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 유입에 미치는 영향(2010.11)	김승원
445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2010.11)	이상호, 이상헌
446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의 특징(2010.12)	오금화
447	국가간 포트폴리오 투자와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로벌 불균형의 현황과 과제(2010.12)	이현훈
448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Mechanism with respect to the Moral Hazards of Financial Intermediaries(2010.12)	김영한
449	Free Trade Agreemen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 The Role of Endogeneity and Dynamics(2010.12)	이준수

450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2010.12) 전봉걸

451 Where to draw lines: stability versus efficiency(2011.1) Thomas J. Sargent

452 Global economic governance after the crisis: The G2, the G20, and global imbalances(2011.1) Andrew Walter

453 기업 다이나믹스와 경제성장: 기업 간 이질성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1.1) 김정욱, 전현배, 하준경

454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국가별 보몰효과 분석을 중심으로(2011.1) 오완근

455 Optimal Implementable Monetary Policy in a DSGE Model with a Financial Sector(2011.1) 이우헌

456 Monetary Policy of the Bank of Korea during the First Sixty Years(2011.2) 이재우, 김경수

457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정보의 생산과 공유(2011.2) 이인호

458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2011.2) 김준경

459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노동공급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2011.2) 김태정

460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2011.3) 정선영

461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2011.4) 김배근

462 Limits to Arbitrage in the Swap and Bond Markets: the Case of Korea(2011.5) 박하일

463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2011.5) 이승환

464 경제의 대외개방도 증가가 숙련 및 비숙련 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1.7) 김영준

465 국제금융시스템의 미래(Futur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2011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2011.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466 SVAR(structural VAR)를 이용한 거시·금융 기간구조(Macro-finance term structure) 모형 분석(2011.8) 윤재호

467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정선영
468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469	The Experience Premium	Hyeok Jeong · Yong Kim · Iourii Manovskii
470	한국의 經濟成長과 社會指標의 변화	조윤제 · 박창귀 · 강종구

* 금융경제연구 제1~200호의 발간목록은 제320호 이전 책자를, 제201~300호의 발간목록은 제421호 이전 책자를 참고하십시오.